

1989년2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72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석하고 공화당석이 짝 차 있으니
 보기 좋으네요. 의결정족수는 안 되었지만 회의
 정족수는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오성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김재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
 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시겠
 습니다. 먼저 네 의원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류승규 의원 나오서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규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탄광 노동자 출신 통일민주당 류승
 규입니다.

4·26 총선 이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상 많
 이 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5공화국 때 총칼로
 탄압하고 그 일가친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백담사

에서 소위 참회의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입
 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
 고 성실하게 일하며 권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
 다. 광주학살의 원흉과 5공비리 주범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
 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5공비리에 대하여는 별로 질문하고 싶지
 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의원들이 추궁
 을 하였으나 정부의 답변은 항상 거짓과 호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사명인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역
 사적 과제인 5공비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제2의 6월 민주항쟁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부터 이 땅의 주
 인이면서도 아무런 특권도 특혜도 없이 성실히
 일하는 민중의 사회현실 특히 노동현장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사정 3자회의에서 노동부
 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
 최저한의 삶이 어떻게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최저임금 책정방식이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현재 결
 정된 최저임금 14만 4000원은 특권층 몇 사람의
 점심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

키지 않는 악덕기업이 아직도 있다면 이러한 기업이 과연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얼마나 되며, 그런 기업주에 대한 정부의 처벌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자행된 공권력 개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노사문제는 정부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분규가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풍산금속 사건을 봅시다. 풍산노조 안강지부는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만 취하하면 1월 4일부터 정상근무에 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2명의 조합원밖에 없는 공장에 약 4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 노동자를 연행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데 내무부는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생치안 확립 및 불법파업 등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곧바로 풍산금속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계획된 공권력 개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월 4일 풍산금속과 1월 8일 현대테러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현 정권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말살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풍산금속과 현대테러사건에 관한 대책회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대를 이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노조설립신고증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유명 노조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김무연 씨에게 상급단체의 가맹인준증도 없이 접수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교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노련, 병원노련이 인준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더우기 다국적기업인 모토로라 코리아와 한국 슈어프로덕츠에서 자행된 구사대 폭력과 위장폐업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부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관, 외국인기업들의 불법 폭력행위 및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장폐업한 기업을 노동조합이 자주(自主)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부장관!

내무부는 노동문제를 치안유지 차원에서 강권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토로라 코리아에서 작년 12월 29일 경찰이 사업장의 외곽경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 10여 명이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태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12월 27일 노조 측 노동자 4명이 화상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조 측은 구사대가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는데 범인은 잡으셨습니까? 게다가 작년 12월 29일 조합원 정정옥 씨가 구사대에 구타당하여 낙태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 남편이 자살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 전 한국슈어프로덕츠와 신애전자, 동양제과의 노동자들이 위장폐업 철회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소위 닭장차라는 것에 태워 난지도 쓰레기장 등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다 버렸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노동자들이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88년 12월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연행 조사 받거나 구속된 노동자 수와 그 죄명은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구속될 때에는 업무방해 또는 폭력 혐의로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구속당합니다. 현대, 대우정밀, 풍산금속, 모토로라 등에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사대 폭력이나 테러사건의 경우에는 기업의 말단실무자만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관은 이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업도 회사 경영진의 대표가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현대테러사건의 책임자인 그룹 회장의 구

속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장관!

현재 노동문제로 조사, 입건, 구속된 기업주는 몇 명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노동 무임금 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정밀 등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주요한 요인이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라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6월 노동부는 무노동 무임금을 행정지도지침으로 시달하였다가 전국적인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혀 7월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장관은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불은 휴업기간에 준하여 그 귀책사유에 따라서 정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2월 9일 노동행정 개선방안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경제기획원의 89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총리는 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지도가 중대한 사회문제인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기업주의 횡포와 야합한 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의 사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부장관!

노동삼권 보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위축, 사회혼란이 야기된다는 미명 아래 단결권을 제한하고 파업권을 교묘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왜 이들의 노동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까? 87년, 88년에는 노사분규가 유사 이래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도 경제성장은 오히려 외국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업을 무조건 불온시하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의식전환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안보논리를 가장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행위는 노동자를 체제 내로 수렴하기보다는 체제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관!

최근 방위산업체를 축소 조정한다고 하는데 방위산업체 지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탄압을 목

적으로 했던 것이 명백한바 방위산업체 지정을 아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현재 대우정밀, 풍산금속 조합원들이 방위산업체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상당수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는 5공화국의 잔재입니다. 이는 5공비리와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야 3당의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에도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구속자의 석방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방위산업체에서 쟁의와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국무총리!

국내 독점재벌이며 방위산업체인 삼성중공업, 풍산금속, 대우정밀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병역특례 노동자에게 입영영장을 즉각 발부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노동조합법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영장발부의 적법성은 놔두고라도 과거에 독재정권이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이라는 도구로 군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또한 삼성중공업 해고자 9명의 입영연기 신청이 병무청에서 부결된 것과 같은 시기에 해고무효소송 중인 주식회사 통일의 병역특례자가 입영 연기된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자와 직업병환자 수가 6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반복형 재해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지난해 38개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가운데 각종 검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 20개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자격미달인 의료기관이 어떻게 지정될 수 있었습니까? 그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돌팔이 병원에서 멸절한 사람 병신 만들고 정부는 죽은 후 보상한다는 것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며 그나마 보험급여 수준도 비현실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한 번 죽고 산재브로커에

휘말려 두 번 죽고 배상액 계산방법이 바뀌어 세 번 죽는 것이 산재환자들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장애 유형별, 등급별, 가족 수별 월 실질생계비를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직업재활 고용촉진대책은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고 불구 되어 퇴직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살림은 쪼들리고 가정은 파탄되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가난이 대를 물리게 됩니다. 결국은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자식들은 가출하여 어린 나이에 길거리나 공장을 전전하게 됩니다. 노동부장관은 산재환자나 직업병노동자 중 자살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하는 차제에 산재직업병환자의 의료보험 박탈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산업전사들이 산업전선에서 부상당하고 죽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부책임하에 사회보장 측면에서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탄광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차 석유파동 이후 5공화국이 조광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조광권을 허용함으로써 석탄을 과잉 생산시켰고 현재 체화(滯貨)량이 국내 연간 생산량의 58%인 1400만t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부가 최근 3년 동안에만 외국석탄을 900만t이나 대량 수입한 데다 지금도 국내 굴지의 8개 종합상사가 공업용 무연탄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석탄업계를 심각한 판매난과 불황에 휩싸이게 하고 임금체불과 만성적인 노사분규 및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정부 에너지정책의 오류로 탄광노동자만이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합니까? 6·25 이후 가난의 한, 못 배운 한을 안고 그래도 2세만은 훌륭히 키우겠다고 탄광촌을 찾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정치 없이 떠도는 부랑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리!

금년부터는 소위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시행되는데 올해 폐광되는 탄광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

상하는 실직노동자 수는 지역별 몇 명입니까?

그리고 실직노동자에게 정부가 자영업자금이란 명목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고물가시대에 5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는 죽거나 철창 속에 들어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슴은 검은 탄가루에 찌들고 재주라고는 탄 파는 재주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주역들에게 그들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전국 35만 탄광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들에 대한 확고한 생활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에 맞는 대체산업을 유치한다 하였는데 과연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였습니까? 무연탄발전소를 탄광촌에 건설했습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했습니까?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는 합리화 시행 전 정부가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 선무(宣撫)하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탄광촌은 석탄산업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닌 공업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 전환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탄광촌에 유치하여 부녀자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탄산업을 국공영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에 심한 저항감이 응어리져 있는 탄광촌노동자의 깊은 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2만여 진폐환자들이 자영할 수 있는 농축산단지의 조성은 이들의 재활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면한 탄광노동자 문제 전반에 걸친 본 의원의 질문에 총리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에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악법은 유신독재를 뒤이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하여 더욱 개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민주발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

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의 보장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비롯하여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진폐보호법 역시 획기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문제는 일반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가변성, 정치성이 있어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별도 독립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동재판소를 설치하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노동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학생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추진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통일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만이 유독 소외되고 있는 것은 크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 노동자, 농민은 역사창조의 주역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는 노동자 농민이 남북 노동관련단체와 농민관련단체의 상호 교류를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남북한 상호 간에 교류 및 왕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북한관련 서적에 대해 압수수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재벌과 정부가 독점하여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를 여전히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술책이 아닙니까?

내무부장관!

경찰이 5공 때 수배되었다가 사면 복권된 민주인사들을 다른 혐의도 없었는데 추적하고 연행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박종운 군, 최황 군, 성균관대학교 조지훈 군 등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배 해체된 민주인사들에 대한 소재추적 및 연행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보사부장관!

우리나라 어린이가 정부의 은밀한 지원 아래 매년 8000명가량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아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최대의 역사의 분기점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민주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진실로 번영된 자주통일국가 건설해 가느냐 아니면 5공잔재의 수구세력에 의해 독재와 민주, 평등과 불평등으로 대립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5공잔재의 청산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5공잔재의 청산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경제의 민주화, 산업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민중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윤리적 요청인 동시에 사회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정치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기능을 외면하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는 혁명을 요구하게 되고 혁명은 불행하게도 피를 부른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만 의원 신민주공화당 소속 대전의 머슴 김홍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이 나라 2000년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역사의 벼랑에 서서 갈등과 혼란과 위기의 2000년대를 맞이할 것이냐 참으로 국가적 명운과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논의해야 될 엄숙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역사를 파헤쳐 새벽의 밝음을 끌어내는 확실한 구시대의 결산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답답한 이 정치현실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서글픈 사회의 일단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책임이 이 정권의 민주개혁 의지의 결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습시다라는 본 의원도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총리고 장관이며, 누가 참모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음을 적지않이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소신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허위에 찬 답변을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동족살상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출발했던 전두환 정권은 그렇게 철저하게도 도덕적으로는 패륜야요,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불법한 군사독재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국가의 오장을 아무렇게나 관리했던 전두환 독재자는 오늘날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 형해화된 몰골로 백담사 삭풍 속에 인과응보의 염불을 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연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재자의 혈통을 수혈받은 이 노태우 정권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과거의 확실한 청산과 민주화 아니면 아니 되는 외길 수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아직도 5공과의 악연의 구린 정을 끊지 못하고 잔존 수구세력들의 등살에 좌고우면하며 민주화의 2단 변속기어를 넣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의 정체불명성에 대해 국민들은 울화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총리께서 생각하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안정책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보다 높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2000년대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보다 작은 것을 포기치 못하고 5공과의 쌍태아 뱃줄에 매달려 '이 사람을 믿어 주세요'란 말 한마디로 1년을 허둥대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믿어 달라는 것인지, 아직도 지난날의 연민의 정을 끊지 못하고, 민주화 개혁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보통사람이라고 말해 왔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보다도 더한 것을 각오치 않고서는 노 정권의 운명을 재촉할 역사적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고언을 대통령께 직접 하실 용의들은 없으신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소신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공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완전히 외면한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민주화의 실천의지, 국가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와 불신은 아무리 화해의 논리를 강변한다 해도 이는 한낱 꾀변이요, 구호요, 무리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6·29라는 고도의 정치적 기만술에 농락당했다는 자각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원죄인 12·12 사태와 백담사에서 뇌관을 장진하고 동반자살의 무기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 흑막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혹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씨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대 줘서 당선시켜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전두환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 고마움의 의리로 해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정치자금 흑막에 대해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를 주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간평가 문제만 해도 하겠다, 안 하겠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노 정권의 우유부단함에 많은 회의와 불신을 갖고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총리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간평가 문제는 노태우 후보가 선거전략상 득표를 목적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299명 어느 누구도 1년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 드리는 말씀

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법에는 없는 국회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답안지를 남겨 주어야만 하는 책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독재 7년간 줄곧 국민들한테는 법대로만을 외치면서 뒷전에서는 온갖 이권을 사냥질한 무법자요, 5공비리의 원흉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유독 정부가 법에 대한 특별한 예외만을 고집하는 보편적 법리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닌지, 이젠 전직대통령이란 식상한 구실은 아직도 민주화의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이요 또한 하지 않겠다는 노 정권의 확실한 입증이며 왕정과 민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실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무모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동시에 밀도 끝도 없는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죄를 묻지 않고 적당히 은폐와 타협 속에 구겨 넣어 불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증폭된 부정과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예비하게 될 것이며, 법의 공정한 집행이 전제되는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 도 싹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검찰의 즉각기소와 차라리 박삼중 스님의 교화결과를 토대로 한 법의 정상참작 정도의 해결책을 얘기했던 어느 친구의 말이 새삼 기억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가 구시대를 청산함에 있어 관용과 사랑에 너무 인색해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은 밝혀내야 한다는 확실한 당위와 원한의 악연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민족의 정기와 사회의 기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역사의 필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두환 씨를 즉각 기소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

우리는 작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문제는 좀 봐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민생치안 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 하는 이런 연약한 대통령이 있느냐는 세간의 여론을 총리는 들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보십시오! 백주에 폐강도가 설치 댁니다. 이젠 딸도 딸이려니와 심지어 시장에 나간 마누라까지 걱정해야 할 인신매매범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광경을 본 자식과 어머니의 그 심정!

가정과괴범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 어떻게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게다가 투전기나 성인오락실을 무대로 날뛰는 조직폭력범에 공권력(公權力)이 공권력(空權力)이 되고 있습니다. 향락업소나 뒷골목을 무대로 해서 마약사범이 판을 치고 있는 판국이니 이게 바로 공권력이 실종된 위기요, 무정부 상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무능한 정권, 무능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위기가 바로 노 대통령과 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 보는데 내무장관은 민생치안대책에 획기적 방안과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권력유착에 1000억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투전기업소에 대해 전면적 개선과 단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공익을 수호하는 대변자로서 국민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권의 행사는 정권의 시녀로서 또는 전가의 보도처럼 검찰력을 통치권력의 지배도구로써 남용되어 왔음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6공화국에서만은 검찰이 이러한 오욕과 불명예를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위상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이 능장수사다, 변죽수사다, 정책수사로 정치상황에 편승하여 각본 따로, 수사 따로, 결과 따로로 발표되는 5공비리수사에도 검찰이 스스로 검찰권을 포기하고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10·27 법난이라든가, 삼청교육사건, 특히 특권층이 개입한 부실기업 정리, 언론학살 원흉들에게 아직도 수사손길을 멀리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아냥과 자조 섞인 체념들 그리고 연일 대서특필되는 언론의 비판적인 논조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젠 회의와 불신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쇄신방안과 또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겠다는 자세는 되어 있는지 장관의 소신과 솔직한 양심의 답변을 바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유권무죄요, 무권유죄’라는 시쳇말이 통용되는 검찰풍토를 쇄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하는 지식인들의 실종이었다고 봅니다. 음습한 독재의 그늘이 아무리 어두웠다손 치더라도 확실히 우리 지식인들의 펜은 칼 앞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저항 비폭력을 얘기했던 간디처럼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사 사약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 앞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옛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이 그렇게도 목말랐던 한 시대를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관, ‘타는 목마름’으로 한 시대를 방황했던 우리 상아탑에 이상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 외적 강요에 의해 유린당했던 대학이 아직도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대학생 과외 허용은 캠퍼스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본질이 이탈되어 혹시나 과외열풍으로 번진다가 해서 사회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생 과외 이외의 여타 과외의 금지대책과 교육방송채널을 활성화해서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통일무드를 타고 국민들이 북한실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 등을 방송국이나 언론에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알게 하여 호기심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서적의 출간허용과 단속이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서적의 출간허용과 단속의 한계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방송의 허가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산영화계가 UIP의 직배횡포로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산영화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분간 UIP의 직배를 유예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서울올림픽의 총결산은 언제 매듭지어지며 추정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에 위임 결정케 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심지에서 요즈음 한 집 건너 생겨난 안마시술소라든가, 퇴폐 이발소, 호화 사우나, 호텔 등의 범람현상은 일찌기 로마의 멸망이나 오늘날 미국의 쇠퇴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걱정스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폐적 향락

성 소비문화 만연에 대한 대책과 한국이 아기수 출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아(棄兒)문제 그리고 기아의 해외입양 실태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이나 돈이 없으면 아무리 중환자라 할 지라도 종합병원에 입원 가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부족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경로당을 갈 때마다 어른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노인복지정책이랍시고 이까짓 쓸데 없는 우대증인가 천대증을 만들어서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내 돈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한답니다. 이거 늙은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천대하려고 작정한 거지 이게 어디 되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꼭 요따위 짓이나 하니 한심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이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무슨 버스회사 같은 데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세워서 말로만의 경로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노인을 경시하는 경로(輕老)가 아닌 진짜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장관의 실천의지 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980년 관권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노조원들이 현재까지도 생존권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은 억울하게 강제 해직된 노조원들의 보상 및 복지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대전 순시 때 밝힌 91년 세계산업과 학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기로 하고 대전을 제2의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보다 심한 교통난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대전직할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박람회 개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전의 교통난 해소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전의 교통난 해결의 요체인 남부순환도로와 한밭대

로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산지역 행정타운 건설계획 변경을 철회시키고 원안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확고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아픔과 책임을 함께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여야라는 장벽을 뚫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장래를 논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은 내일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피로한 근로자와 농민의 눈에도 아침햇살은 밝아야만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념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감정은 동서로 나뉘어진 민족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세대 간의 갈등, 엄청난 문제들을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헝클어진 조국을 조심스럽게 추스려 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최선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국민을 속이지 않으려는 정직과 길이 아닌 곳에는 국민을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정도'만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 정치지도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내일의 국가건설에 힘을 합칩시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온 정열을 다 쏟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달서 출신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45회 임시국회가 국정을 논함에 있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새로운 민주화의 조류에 따라 정치적 발전은 물론 보다 진지하게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의를 벌여 오신 여야의 모든 의원이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인간답게 사는 사회, 정의와 화합을 이루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하부체계가 정치권의 지나친 영향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문제와 관련된 의정활동 노력은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정치적 욕구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복지향상과 굳건한 국가건설에 있다고 본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생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이슈와 대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우선순위를 앞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자올림픽총회에 참석차 출국 중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가운데 88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자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크게 보도한 기사를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양대 올림픽을 개최하고 섬유수출 세계 1위, 자동차생산 세계 10위의 경제부국을 이룩한 한국국민의 근면성을 높이 평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말미에 국민복지 수준 세계 40위라는 뼈아픈 지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신을 읽고 과거 오랫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직접 참여한 바 있는 본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1970년대 말까지의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긴장과 남북대화, 국민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근대화를 위해 일면 국방력 강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일변도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의 재분배나 안정, 평등 등에 입각한 사회개발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입안자의 관심사에서 소외당하였고 사회복지의 대상범위나 보호수준도 최저원칙에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실행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은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신장시키는 데에는 크게 공헌하였지만 반면에 이에 따른 후유증도 점점 증가시키는 결과

를 초래했습니다. 예컨대 부의 편재현상이 소득계층 간에서나 도시나 농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나친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사회에 팽배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과 사회 각 계층과 집단 간에는 의식과 시각에서 커다란 차이를 형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노동현장의 심각한 노사분쟁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가치관이 무너져 사회 각 분야에서 아노미현상을 일으켰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구조를 내부로부터 약화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경제와 복지정책의 균형 있는 실시로 소외계층을 줄여 나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조기에 치료해 나감으로써 사회정의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통합과 국민연대를 형성하여 자주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사상이 만연되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윤리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불우아동, 비행청소년, 영세노인, 장애인 등 소위 소외계층과 그늘진 곳은 더욱 증가해 가는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인신매매, 퇴폐 향락행위의 극성, 청소년의 포악행위, 자살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여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보다 전문화된 사회조직과 공적 기능에 의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가, 노동자, 농민, 나아가 전 국민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여 이룩한 부와 자원을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부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구호적 시혜적 성격의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복지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민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대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코자 합니다.

국무총리!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선진 서방국가의 복지 모델을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과 사회윤리 덕목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곧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한 선진복지 한국의 모형이나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볼 때 우리나라의 행정은 지금까지 국방과 경제 위주의 행정으로 치우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중점 행정분야에는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분야에는 이러한 기구와 비견할 만한 기구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행정 각부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경제과학심의회, 교육개혁심의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통치권력구조로 봐서 대통령 직속하에 사회보장회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면 복지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복지담당 부처 간의 이견의 조정과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의 실시에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로 보훈처의 군사원호업무, 총무처의 공무원연금업무, 국방부의 군인연금업무,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업무, 국민연금업무 등 각종 사회보험업무와 공적부조업무, 사회복지사업이 각 부처에 분권 처리되고 있어 많은 낭비와 각 사회보장제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배경이나 각 이익집단 지역 간에 이견이 일어날 수야 있겠지만 국민복지의 향상과 장기적으로 볼 때에 평등과 비례에 따른 기여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과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들 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할 사회복지청을 보건사회부 산하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복지사무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사회복지분야의 일선에서 직

접 참여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재산이 340만 원 미만에 월소득이 1인당 4만 4000원 미만인 절대빈곤자가 전 인구의 5.3%인 무려 2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 한국일보의 '함께 사는 사회'란에 게재된 한서국민학교 3학년 정두산 군의 '삶의 이야기'는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데 커다란 경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칠순 할머니와 어린 누나가 함께 사는 정 군은 점심을 굶어 학교 가기가 싫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큼직한 빵 1개씩을 학교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개학이 빨리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굶지 않게 고아원에 보내라는 주위의 권유도 많이 받았다는 정 군 할머니의 말씀 속에 본 의원은 이들의 복지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 현실이 먼 이웃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일이며 전국에 6000여 가구가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영세민들의 자립 자활대책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돈, 윤리성 결여, 아동성장에 유해한 환경의 범람,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가족해체현상, 미혼모의 양산, 경제적 빈곤가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연간 약 2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이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과 보호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집도 없고 직업도 보장 없는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을 위한 장기복지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우아동 결연사업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복지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한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된다고 할 만큼 장애인 문제는 나라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이 아니라 장애자를 두고 있는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대 최고의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는 물론 관련제도,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장애인등록제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자가 1988년 말 현재 11만 367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5년 인구보건연구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 수는 약 98만 명이었고 통계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전 인구의 약 5%인 200여만 명을 장애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장애자의 등록 수는 너무나 과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장애자의 등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처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업적과 장기적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저소득 영세계층을 이루고 있는 모자세대 지원에 대한 입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가장과 주부와 직장인의 삼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지금 역할상실의 상황에서 무료로 낳을 보내는 고령인구의 절대다수가 증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고독이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어느 무의탁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제는 1988년 한 해만 해도 157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로우대제라기보다는 경로푸대접 또는 경로거부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정부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경로효친의 사상을 고취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과 해당 노인에 대하여 경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제정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도입 당일부터 잘못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는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직장근로자나 공무원, 교원, 군인부터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의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인 수가 적은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규모 공장근로자는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실시기관의 일반수가가 보험수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보험 미적용대상 국민이 치른 희생은 수조 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1988년 이전까지는 농어촌주민을 제외함으로써 농어민들은 과거 10여 년간 불이익을 당하였는데 이제는 군규모의 행정구역 단위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결성토록 하여 조합원인 농어민끼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불평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타 조합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대단히

높아 우리나라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약 20%가 소요된다고 하니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도 실제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며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구성비가 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가 왜 이렇게 높은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하기 곤란한 사실은 인구 1만 내지 2만 명 단위의 작은 조합에 이르기까지 전산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전산운용의 개념도 모르고 전산시설만 설치하면 잘하는 줄 아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설의 이용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거나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또는 외부로부터 관련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작은 조합에 전산시설을 독자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같이 전자통신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전산시설을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설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관의 합당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73년 제정 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민연금제도가 제6공화국 출범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은 정말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농어민과 자영자 등은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토록 해 놓고 강제가입은 공무원 및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도입 초기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사회의 핵이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위화감과 복지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전 국민 확대 적용방안은 무엇이며, 지난해 조성된 5250억 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은행에만 예치해 둘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사업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신 분들

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어느 국민들보다도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장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들 국가유공자 가운데에도 4만 7019명이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병원조차 부족하여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소에만 개원되어 있는 보훈병원을 대구와 대전에도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호대책을 국무총리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질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단지 조성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환경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대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수돗물마저 불신하여 생수, 샘물 등 물까지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생활에 환경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보전과 조성에도 노력해야겠지만 산업발전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에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직접 인체에 유익한 곡식과 수자원에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의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낙동강 지류 중 가장 오염이 심한 지천인 금호강 합류점을 경계로 오염정도가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1986년도 금호강 합류점 상류구간인 안동댐 구미 달성지역은 대체로 연평균 BOD 2.0PPM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연환경의 순리를 무시하고 건설된 영천댐 설치 이후 금호강의 오염은 1988년 11월 BOD가 놀랍게도 100PPM에 이르러 죽은 강으로 변한 것입니다. 금호강 오염이 대구 3공단 염색 공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공단폐수와 지역주민의 생활하수에도 기인하는 점이 있지만 영천댐 건설로 댐 유출량의 94%가 포항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하천유지용수가 태부족하여 강은 더욱 건천화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강 유지수 부족과 기득 수리권 회복 측면을 고려하여 금호강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호강에는 1일 20만t의 수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호강 오염을 계속 방치한다면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도 머지않아 극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함께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담당부처를 살펴보면 자연보호는 내무부, 하수처리는 건설부에서 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현실점에서 환경업무가 각 부처에서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환경청을 부가 아닌 처로의 승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처의 성격상 행정 각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총리이고 여타 경제담당부서도 부로서 장관급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이왕 승격시킬 바에야 행정 각부장관과 마찬가지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부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기존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냉철히 분석 평가하여 어느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가를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국가, 국민의 부담능력과 국민의 복지욕구 수준과 비교하여 취사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독창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이념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면서 소득의 재분배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평화민주당 소속 전남 여수 출신 김충조 의원입니다.

40년 헌정사상 가장 지대한 명제인 민주화 정착이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상명령을 수임한 13대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바는 본 의원의 질문은 한 개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궁극적 관심과 답답함과 시정촉구와 질책이 담긴 국민의 질문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은 역사와 국민을 향한 증언이요, 해명이며 방향제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총리와 국무위원의 답변은 당연히 무책임성과 임기응변성과 불성실성을 배제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회·문화부문의 모든 병폐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비도덕성과 부정통성에 기인한다는 대전제를 먼저 제시하는 바이며 따라서 사회·문화문제의 정권적 배경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사람의 기치를 내걸고 나선 노태우 정권의 지난 1년간의 통치적은 5공단절과 청산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두고 옆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불균형, 불평등, 불합리를 노정시키는 연속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구체제의 기반이었던 핵심터전을 건재시킨 채 5공단절을 호도하고 5공특위와 광주특위 그리고 언론탄압의 청문회를 통해서도 축소조작, 확대날조 등의 궤변, 관련 증인과 정부여당의 담합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아닌 진상은폐 쪽으로 대국민 기만술책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이른바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일응은 긍정하는 체하면서도 이들 광주의 민주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육, 상해, 암매장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자위권 발동 운운으로 정당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보상 운운의 발상으로 위대한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교통사고 사상쯤으로 평가절하시키려는 음모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의 잔인한 대학살을 딛고 정권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행 등의 기저의식인 인명경시풍조를 낳았으며 또한 도덕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정권이 정권유지수단의 하나로 국민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사치, 향락, 퇴폐, 음란산업을 조장, 방조, 묵인해 온 결과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창출시켰다고 보는 본 의원의 진단에 총리는 동의하리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혼란과 규범의식의 이완현상은 불신감과 허무주의의 만연에 따른 사회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하였으며, 권력형 치부에 짓눌린 정당성 없는 사회불평등은 소외와 갈등과 이기주의로 발전되어 심각한 사회적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딸, 우리의 누이와 자매들이 시장통, 귀갓길에서, 백주의 대로상에서, 자가운전 자동차 안에서 유인·납치·폭행당하여 인신매매와 성범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평생의 삶 전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작금의 반인륜적 범죄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시대에서 원시와 현대, 야만과 문명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병리현상의 온상인 퇴폐향락산업의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회구조의 모순은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여기에 연유하여 파생되는 불만과 저항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시책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서구의 복지이식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의 복지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때에 방금의 우리나라의 갖은 욕구분출도 오랜 군사문화의 억압 속에 갇혔던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은 주어진 상황으로 겪음으로써 실질복지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확립한 존 로울스(John Rawls) 교수는 오랫동안 공리주

의원리로 인정되어 왔던 벤담(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적어도 소외계층을 포용하지 아니하는 최대다수는 맹목적 의미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의 최대다수의 행복에 의해서는 결단코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이전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빈민 소외계층에 대한 생존보호·복지지향의 정부정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반공동체이식에 따른 이윤추구 일변도의 경영에 희생당해 온 또한 희생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확보나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정부정책에 의해서 적자가계를 강요당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이나, 열악한 조건을 도리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전국 200만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삼권 보장문제나, 수도권 30만을 포함한 전국의 100만 노점상들의 고통 등등을 방치하고서는 결코 복지사회의 위치는 확립될 수 없다고 보는바 이러한 저간의 소외계층의 욕구를 대폭 수용하는 획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생존확보, 복지향상, 정치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국정집행인식의 대전환이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최근 정부에서는 그 진실성과 정확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갖가지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을 오도·기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지난 1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88년 사회지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 광주지역이 46만 4000원으로 서울지역 43만 1000원을 누르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계층의식에 관하여 무려 60.6%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직접생산계층인 노동자, 농민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 수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통계에 있어서 모집단의 결정과 표본추출의 방법 그리고 조사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통계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래 지금까지

지 이러한 통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중산층 비중의 날조에 급급해 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때에 국민을 환상적으로 최면하는 이 통계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정기국회가 조합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료보험법 제정방향을 결의하고 1982년 보사부가 이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요(要)연구검토'로 보류되고, 뒤이어 통합주의를 지향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독직이라는 누명을 씌워 강제 숙정한 83년 보사부 파동을 빚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적 소신으로는 통합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안제출을 할 수 없었던 당시 보사부 김정례 장관의 눈물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료보험 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과 의료급여에 있어서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보사부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도시자영자 소득과약률이 목포의 경우 13.1%, 성남시의 경우 3.0%, 춘천시의 경우 5.3%라는 등 정부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통합에 반대해 오고 있는바 차제에 다수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통합지향으로 자세전환을 함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 개인 소신으로는 통합일원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고 하는데 안보차원의 정권유지 방편으로 급조 탄생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체계 방향을 통합 쪽으로 바로잡기 위한 의지 갖든 용기를 발휘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 보사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안을 보더라도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층이나 특권층은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500병상 이상의 전국 27개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역기능을 창출해 낼지도 모를 이 개선안을 보사부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악용하여 대규모 종합병원의 병상이 '가진 자'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또한 갖고 있는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사회적 계급의식을 부채질하는 망국적 분과 집단화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961년 5월 당시 박정희 소장을 주축으로 한 일단의 군부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래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27년간 동안 권력중심부에 대거 진출하여 그 권력전횡의 폭과 기반을 확고히 해 온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룩하여 속칭 T·K사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의 수뇌부와 권력기구의 요직을 중점적으로 장악하여 독점적 배타적 지배층을 형성함으로써 단순한 지연, 학연 중심의 집단이 아니라 이 나라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병리현상적 갈등을 첨예한 적대감으로까지 심화시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바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간의 위화를 타파하여 시급한 국민화합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T·K사단의 해체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더 떠서 T·K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이 인맥을 포함하여 친여 또는 친T·K 인맥을 총망라하여 가칭 경신회라는 집단형성이 꾀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총리는 이에 대하여 아는 바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감정, 지역격차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 특위와 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의해서 지역감정과 격차에 관한 독소적 요인들이 밝혀져 왔지만 인사행정의 불균형, 지역개발 투자의 차등 등에 따른 지역격차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민족적 국가적 과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인구대비에 따르더라도 호남 대 영남의 비율이 16 대 29 선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공의 경우 정부고위관료의 호남 대 영남 비율이 9.6% 대 43.6%, 제조업 분포에서 8.0% 대 40.3%,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88년 8월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 공직자 호·영남 대비가 9% 대 28%, 정부투자기관 임원 7% 대 31%, 장관급 장교 이상 12% 대 44%, KBS MBC 임원 7% 대 36% 등의 통계에서도 망국적 지역격차의 현상은 두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병폐야말로 5·16 군사정권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군사통치집단이 극대화시킨 민족적 범죄행위임을 노태우 정권은 깊이 참회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 치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백제권 문화의 재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를 할 구상은 없는지 이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전면금지 방향으로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과외허용에 관하여 묻습니다.

인간다운 인간 양성이 아닌 기능적 출세인 배출을 목표로했던 70년대 과외과외의 그 음침하고도 답답했던 열풍이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과외허용방침을 제시한 문교부로서는 뒤따라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정상적인 정규교육질서의 파괴, 우수교사의 교육계 이탈, 소득계층 간의 위화, 학생들의 건전한 인간관계 파괴, 교육의 기회균등의 저해 등등 예상되는 갖가지 사회 교육적 병리현상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질문에서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문화공보부 관장의 교육방송을 문교부 관할하에 그 채널을 독립시킬 구상은 없는가?

또한 아울러서 대학입시 출제분량 중 25% 내지 30% 선은 필수적으로 교육방송 강좌내용 중에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측의 두 차례에 걸친 학생운동 관련 제적학생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1983년 11월 30일 대통령령 11292호에 의해서 1987년 8월 29일 대통령령 12237호에 의해서 대학학생지원령 중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규정의 허점 때문에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제에 이 잘못된 규정을 개정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당장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필칭 보통사람을 자처하여 진출한 노태우 정권이 최근 서울 8학군 고교생 학교배정 시 부유층 특권층의 자녀들을 근거리인 9학군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9학군인 봉천동, 신림동 거주학생

들을 강북으로 몰아냈다고 하는데 가지지 못한 서민의 자식들은 버스를 두 번씩이나 타고 강북으로 통학케 하고 가진 자들의 자녀는 근거리 타학군에 특별 배정하는 작태가 과연 보통사람을 위한다는 노 정권이 하는 일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문화공보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종교대책에 관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1985년 지침에 따라 현실참여 교역자 순화 명목으로 순화대상 종교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1985년 1395명, 1986년 2735명을 문제종교인으로 규정하여 순화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면 부천시(富川署) 성고문사건 관련 종교계 불순책동 순화라는 표현을 지침에 거침없이 포함하고 있는바 도 대체 반정의적 집단이 정의의 집단을 순화시킨다는 식의 소위 순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중교적 규제를 통한 종교의 자유침탈책이 현재에도 은밀한 종교대책지침으로 유효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묻습니다.

현 정권이 5공상속정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참고하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 MBC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특집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마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80년 5월 광주의 그 무자비했던 학살, 총으로 쏘아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곤봉으로 때려 죽이고 철사줄로 굴비 엮듯 엮어서 그리해서 죽이고 트럭에 실어다 암매장해 버린 그 처절한 광주대학살의 진상이 실로 8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의 증언과 서독 NDR 등 외국기자들의 자료화면을 통해 아쉽게나마 공식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한 전국의 시청자들뿐 아니라 신문이나 옆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에 접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일으킨 언론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공 언론말살 잔재 의식으로 방영의 사전규제를 획책하였으며, 방영 이후에는 공정성 결여 운운 요지의 비난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작태를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비단 어머니의 노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원리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말하는 공정성이 민주국민을 학살한 가해자 측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애국 광주·호남인들의 주장을 산술적으로 균분하여 동일시간 동일분량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노태우 정권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자기기만적 꾀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산술적 배분에 의한 공정성의 논리대로라면 8년여 동안이나 피해자의 입을 봉쇄해 놓고 일방적으로 가해자 측의 주장만 국민에게 전달해 왔으니 이제 똑같이 8년 동안 가해자를 침묵케 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만을 전달해야만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공비리 척결과 함께 노 정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 광주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노래 차원의 방영물과 지금까지 미공개되었던 광주민주항쟁 관련 모든 필름들을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집중 방영케 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의 일환책으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사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공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은 더욱 악성화되어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손상에 대하여 서구 선진국들은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극히 우려 갖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신선한 대기, 생기 있는 토양, 질푸른 해양, 조화를 잃지 않는 생태계의 유지 등을 위해 보다 심각해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관계기관의 지위격상, 기능강화, 기구확대 등이

국회를 통하여 거론된 지 오래거니와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 가지를 묻습니다.

80년 해직공직자에 대하여 정신적 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 국보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공단절 작업이 인사행정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행되었느냐를 가늠하기 위한 질문이니만치 명확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엄숙한 심정으로 정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프랑스혁명 등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모든 유명한 혁명은 농민 등 시민계층의 불만이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서 이제야말로 농어민, 노동자, 도시빈민 소외계층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최저선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했던 그 농민들의 아픔이, 그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모습이 정부 당국의 눈에는 질서파괴행위로 보였고 사회적 불안요인을 창출시키는 행위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농민들의 생활상…… 2월 13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여당은 농민들의 진정한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층 깊게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녀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중산층화하고 자유 민주 정의를 구가하는 나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나라 건설에 맥진해야 할 것임을 정부 당국에 엄숙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황금 같은 시간이 2, 3분 남아 있기 때문에 못다 한 질문을 몇 가지 더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께서 저술한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대중경제론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출판했던 청사출판사의 대표자가 유언비어유포죄로

입건되었다가 얼마 전 판결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1단짜리 기사를 총리는 읽은 적이 있는가?

이 대중경제론은 자유경제체제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관련교수들이 한국경제의 핵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명저라고 찬탄한 바도 있는데 도대체 이 대중경제론의 어디가 유언비어유포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유언비어유포죄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그 범위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작년 9월 사회에 방출되어서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정부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조작하고 정부에게 이로운 것은 확대 날조해서 대국민적 기만자세를 취하는 이와 같은 작태를 언제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 당시에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도대체 숨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고 또 답변이 시원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련 국무위원이 답변토록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재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승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류승규 의원, 김홍만 의원, 김한규 의원, 김충조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법이 최저임금법 제정목적에 맞는지 또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아직 실시한 후 2년째에 불과합니다. 임금 결정방법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임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 위반기업 처리 등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 다음 질문은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유무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 각 분야에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할 사안이 생기면 관계장관이나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속하는 부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지 관계부서 실무자 간에 현대중공업 정상화방안을 협의한 적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 질문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행정지도가 노사분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장관을 인척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영국에 있는 동안 영국 석탄노조가 50주간 파업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그 나라에서도 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대응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 다음 질문이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병역특례 대상자들을 입영하도록 조치한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당국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

해해 주시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 질문 가운데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지역별 실업 실직 노동자 수 및 생활대책과 탄광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석탄수요의 감소로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석탄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대책을 금년부터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리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광 이직자의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퇴직금, 체불임금, 위로금 일부를 보조하고 전업, 자영업 및 탄광재취업 지원과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영업자 지원은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추진상황을 보아 계속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노동문제를 전담할 노동재판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노동조합과 농민조직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대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북교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교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교류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소위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이와 같은 원칙하에 남북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간의 상호 교류는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동자나 농민들이 이북에 가서 낙후된 이북의 사정을 살피고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이북 노동자나 농민들이 이남에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경제분야에서 기적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홍만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대의 청산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질식케 하는 이 정치현실이 누구의 책임이냐, 총리의 소견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5공청산을 아직까지 못 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안정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발족한 민주화 과정에서 구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측면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측면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측면은 마치 한 물건의 양면과도 같아서 구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시대를 출발한다는 것은 현실사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발전 시각에서 볼 때에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병진관계입니다마는 민주화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고 권위주의는 약화되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숙한 정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소신입니다. 그와 같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구시대 청산의지가 정부에는 미흡하다는 이와 같은 인상을 일부 국민들한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민주화가 소기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구시대가 혼합 존재하는 그와 같은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대적인 도전성격으로서 여러 가지의 대립과 혼란이 여기에 사회상의 일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체도를 시급히 청산하고 민주정치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며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로서는 시행세칙이 마련돼 가지고 우리 민주시민의 새시대 일상생활의 준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필요한 민주법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일단락될 때까지라도 가능한 현행 법제하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가능한 한 지방행정기관에 분산시키고 종래의 관주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치유할 사회적 안정대책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과정의 적극적인 추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전직대통령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내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년여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자금 문제는 역시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중간평가의 실시시기와 방법 그리고 국회와 연계시키겠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간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유사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통령께서 밝힌 바와 같이 중간평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계 의견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결심을 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정치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이란 견지에서 추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간평가로 인해서 헌정질서의 혼란이나 국력낭비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국회와 연결시킨다는 생각은 현 정부로서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전직대통령을 기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특위에서 전(全) 전(前) 대통령 문제에 대한 결말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 중에 91년 대전무역박람회 개최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발전된 산업기술과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전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주기 위한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오는 91년 5월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박람회 개최를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등 각종 지원시설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대전이 호남, 영남,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입지여건 때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2개월여에 걸친 박람회에 1일 평균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박람회의 수용을 위한 세부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국가형 복지모델이 아닌 한국적인 복지모델을 어디에 만들 수는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은 한번 실시하면 후퇴하기 어렵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지나친 복지제도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면에서도 침체를 초래한 영국 등의 실정을 영국병이라고까지 하는 등 여러 서구국가와 각국의 경험이 또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이 겪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 생산성 향상, 정체 등은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한국실정에 맞도록 한국적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면방향을 소득분배 개선과 의료, 주택,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개선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밖의 자산의 분배개선과 임금격차의 완화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수요 충족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전년 대비 무려 53%가 증가된 1조 4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 의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 실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보장회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시고 보건사회부 산하에 사회복지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동안의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를 점차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6공화국의 국정운영 기조를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두고 있음은 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에 따라 깊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이 계속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본연금과 각종 수당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보도, 의료보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함께 자영자활을 위한 주택 및 생활자금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월 5만 원이던 기본연금을 월 8만 원으로 향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서울, 부산, 광주에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환자들이 노령화되어 장기요양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병상이 부족해져서 서울보훈병원의 증축과 부산보훈병원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끝난 연후에 지역별 의료수요를 감안해서 대구, 대전 등의 지역에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호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강 오염방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 오염문제는 실로 정부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산업고도화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한 바 있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 다기화되어 있는 환경보전업무에 관한 종합조정과 기능강화 방안은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전도와 규범이탈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인신매매와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사태에 대한 대책 그리고 퇴폐향락산업의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제반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

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인신매매와 가정과피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철저한 단속에 임하는 한편 검거된 범인들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법을 가장 무겁게 적용하는 한편 처벌법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퇴폐향락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영업과 변태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당국의 단속과 규제만으로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는 데 각계각층의 보다 깊은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임금수준 등 사회지표에 관한 통계의 정확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금수준과 관련된 통계는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종별 임금실태의 결과입니다. 본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산층과 관련된 통계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여러 부문에 걸친 우리 국민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회통계 조사결과의 일부입니다.

본 조사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자산규모나 소득수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귀속되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을 조사하여 집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의 전문화 객관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소외계층의 생존권 확보,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전환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류승규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답변드렸었다마는 복지확충, 소외계층 지원은 무엇보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시혜적 지원보다는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 나가되 교육, 의료, 주택 등 기본적인 생활수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소위 T·K사단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권 개발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세간에는 T·K사단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그러한 조직이 여권 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 집행에 어떤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출신지역이나 여러 가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 여러분들이 공동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그룹활동 등은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역감정 해소와 지적하신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총 54개 사업에 대해서 6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1980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인 종교대책 및 종교인 순화문제에 관한 질문과 MBC에서 방영한 '어머니의 노래'와 관련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기구의 확장, 기능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구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기구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해직공직자 보상대책과 국보위 참가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김대중 총재께서 저술하신 '대중경제론'의 출판과 관련한 문제와 국내 AIDS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

습니다.

이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계장관인 내무부장관과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총리! 어제 본 의원의 답변은……)

관계장관이 나와 합니다.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장관이 누구입니까?)

총무처 장관이 나와서 합니다.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총리에게 답변을 구한 것이지 관계장관에서 답변 구한 것 아닙니다. 총리가 답변해 주세요. 관계장관이 무슨…… 총리가 답변해 주세요.)

(장내 소란)

○부의장 노승환 어때요 김 의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총리한테 물었으니까 총리가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따가 다음에 다시 세 분이 남아 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의장이 그렇게 권한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한동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경찰이 구사대에 대한 폭력을 왜 막지 못했느냐, 노조원의 화상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노조원 정정옥 씨 부부의 피해사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류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사쟁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토로라 이 회사는 서울의 성동구 광장동에 소재한 미국에 본사를 둔 모토로라의 한국지사로서 지난 88년 12월 20일부터 노조원 100여 명이 노조설립 인정 등을 요구하여 사내 농성 중

12월 22일 비노조원인 근로자 350여 명이 농성근로자들을 정문 밖으로 축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27일 정문 밖에서 농성 중이던 80여 명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비노조원인 근로자 50여 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 측의 강문희 등이 옷에 신나 1통을 뿌리고 성명미상자가 불을 붙여 노조원 4명이 화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부터는 회사 내에서 노조위원장 등 100여 명이 정문에 나무상자 40여 개와 폐품 타이어 20여 개를 쌓아 놓고 석유를 뿌린 후 출입자를 통제하며 조업을 방해하자 회사 측 구사대 2000여 명이 폭력노조 물러가라는 반대시위를 함으로써 투석 및 각목 등을 휘두르며 신나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발생 당시에는 회사와 노조 측간에 내부적인 노사문제로서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개입요청이 없어 회사 외부에서 상황을 대비해 오던 중에 12월 29일 20시 40분경 회사 측으로부터 개입요청이 있어 즉시 관할 동부경찰서장의 지휘로 경찰이 개입하여 일단 악화된 사태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관련자 모토로라 공원 김갑득 등 27명을 임의동행하여 수사한바 가담사실을 부인하여 26명은 귀가조치하고, 도충환 노조위원장은 범행사실이 인정되어서 12월 31일 자로 구속을 하였으며,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구사대 폭력을 방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한 방화·화상사건은 노조위원장 등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키 위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위한 위협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나 사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동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조합원 정정옥 씨 구타로 인한 낙태사실 여부 및 남편자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합원 정정옥은 모토로라 공원으로 근무하다가 88년 10월 결혼한 후에 회사를 그만둔 바 있는데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모토로라 노조위원장인 도충환 등 12명과 합세하여 모토로라 전산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기물파괴 등 폭력행위에 가담하였으며 구타로 인한 낙태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옥이 동 폭력사건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12월 30일 정정옥이 귀가하여 남편과 가정불화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후 동일 잠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방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질식사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그 진위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동인은 사생활문제이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 달라며 대답을 회피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정옥 남편의 자살이 노사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류 의원님께서 한국슈어프로덕츠와 신애전자의 시위노동자 연행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의 진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슈어프로덕츠는 서울 구로공단 3단지에 있는 치과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88년 12월 30일부터 회사 측에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근로자 150여 명이 농성을 계속하여 오던 중에 89년 2월 9일 13시 15분경 근로자 100여 명이 한국수출공단본부 현관 앞에서 북과 팽과리를 치며 정상업무를 방해하여 구로공단 본부 측에서 관할 남부경찰서에 해산을 요청해 오며 따라 경찰에서는 수차에 걸쳐 자진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농성근로자들이 재집결하지 못하도록 안양, 군포 이런 방면 또는 행주대교, 난지도 방면 등에 분산 해산 조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애전자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카스트레오 생산업체로서 88년 10월 18일 위장취업 해고문제로 노사 간에 분규가 지속되어 오던 중에 88년 2월 10일 11시경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 해고근로자 대표, 노동청 담당자 등 3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장소에 해고근로자 등 노조원 30여 명이 동 회의장에 난입하려 하므로 이를 저지하는 회사간부를 폭행하고 있다는 그 회사 총무부장의 신고에 따라 관할 남부경찰서 형사기동대가 현장에 출동, 주동자 김영찬을 검거 연행하려 하자 노조원들이 완강히 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계속 들어가려 하므로 진압부대 2개 소대를 추가 배치하여 동 근로자들을 안양과 난지도 일대 행주대교 방면으로 분산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노무현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난지도에 갖다 버리게?)

이는 동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차지점을 난지도지역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류승규 의원께서 사면복권 인사 중 일부 인사에 대해서 소재수사 등을 중지하라는 촉구를 하셨는데 지난해 12월 23일의 사면복권 조치에 따라 경찰에서 수배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수배 해제했으며, 일단 수배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행을 하거나 소재수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홍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종합적으로 민생치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이러한 민생침해사범의 발호로 인해서 국민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것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14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일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부의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의 확립이 내무행정이 지금 안고 있는 최우선과제로 보고 당면대책과 중기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면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5만 6000명 정도의 경찰력을 지금 동원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안본부나 경찰국 등에 근무하는 행정보조원 2000명, 그 밖에 본부의 간부요원들을 야간에는 파출소 근무를 시키는 등 이런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방법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요사이 신문보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민생치안 문제는 진정국면에 일단 들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당면대책과 아울러서 경찰의 대응능력 보강을 위한 중기대책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부족한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

해서 관할인구 부담이 과중한 경찰서에 8582명, 지·파출소가 최소한 2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8700명 또 대도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 그 밖에 민생치안과 직접 관련된 수사경찰 보강에 4200명, 112 주민신고 즉응체제 운용요원으로 3300명, 교통경찰 보강을 위해 3600명 이렇게 해서 총 3만 명 정도를 금년부터 91년까지 증원을 시키고 92년 이후에는 기동대원 중에 1만 4000명을 정식 순경으로 전종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현재 세밀하게 연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인당 인구 635명 수준에서 경찰 1인당 400명 수준까지 낮출 목표하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 경찰의 장비가 노후하고 많이 뒤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 우선 경찰서와 지·파출소의 기동장비를 보강하고, 112 주민신고 즉응체제를 전자동화 하는 문제 그리고 유전자·지문 장비, 마약감정 장비 등 수사장비의 현대화에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할인구 40만이 넘는 경찰서가 전국에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지·파출소가 214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안수요가 과중한 지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장비구입이라고 생각해서 장비구입에 필요한 200여억 원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히 저희 경찰은 민생치안의 보다 확고한 기반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홍만 의원께서 투전기,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촉구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단속을 촉구하신 투전기업소는 전국에 약 259개소가 있고, 전자오락실은 1만 865개가 있으며,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그러한 사실에 의거해서 88년 10월부터 민생치안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단속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업소 1221개소를 적발해서 폐쇄시켰고 불법영업행위자 807명을 구속시키는 등 단속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 올립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경제론'을 출간한 청사출판사 대표를 유언비어유포죄를 적용 입건하였다가 면소판결된 사건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86년 4월 19일 경범죄처벌법 1조44호 유언비어 날조유포 이 조항 위반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4월 21일 '대중경제론' 책자 인쇄소인 종로구 명륜동2가 176 소재 청사출판사를 수색해서 그 출판물을 3000여 부를 압수를 했고, 대표 함영희 씨를 즉결에 회부해서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이 일단 언도가 되었는데 그 후에 함영희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동안 쪽 사건이 계류되어 오다가 경범죄처벌법 1조44호 유언비어날조유포죄가 88년 12월 31일 자로 경범죄처벌법 개정과정에서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8일 자로 법원에서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충조 의원 의석에서 — 유언비어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유언비어로 구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부의장 노승환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허형구 법무부장관이옵니다.

먼저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1988년 12월 21일 이후 구속된 근로자의 숫자와 죄명을 물으시고 현대테러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정회장을 구속하고 방산업체의 분규와 관련하여 구속된 근로자를 모두 석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1988년 12월 21일 이후에 현대테러사건, 풍산금속 노사분규 등을 포함해서 근로자 56명이 폭력행위 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죄로 구속되었고 그중 4명은 그동안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정 회장을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미 구속된 사람

들을 무조건 석방할 수도 없는 일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체의 분규와 관련하여 구속 중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불법 노동쟁의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폭력 파괴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구속하였으며 그들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남북 간에 상호 왕래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북한관련 서적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아닌가고 또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통일논의 개방이나 북한자료의 공개, 대북교역 추진 등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사회의 자율적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헌법과 우리의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체제와 이념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2일 통일논의의 개방과 북한 및 공산당 자료 개방조치 및 동년 10월 7일 대북교역 관련조치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대공 경계의식 와해를 목적으로 북한 실상을 찬양하는 북한방문기,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내지는 좌익적 시각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서적 출판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 원전(原典) 중에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사회주의 문학작품이나 김일성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선집까지 그대로 복제 내지는 전재하는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등 그 도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순수한 학문연구 차원의 출판활동은 적극 보호하겠으나 계급투쟁론적 시점에서 폭력혁명 선동하거나 역사를 왜곡 또는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괴의 대남 선전 선동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는 결코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는 무관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과 자세는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적정 여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검찰권 행사는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평무사와 사회정의 구현을 지향한 형평성을 그 생리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검사를 준사법관인 독립관청으로 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법관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 역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임기제를 채택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측면 외에도 이를 운용하는 구성원의 의지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검찰 스스로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개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검찰의 위와 같이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실상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검찰이 서서히 개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과 모습을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검찰이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제자리를 지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총리께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법무부 소관도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두환 씨를 즉각 기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여당과 야당 모두 사법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가원수로 일하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후 산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참회하고 있고 그의 친인척들이 대부분 사법처리되었으며, 진상규명이 반드시 수사라는 방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임 대통령에 대하여 그 잘못을 물어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통하여 착실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려는 국민적 여망에 보탬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안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그리고 대외적인……

(「검찰이 할 일이 수사 말고 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국가의 체통 등을 고려할 때에 이를 검찰 차원에서 사법처리 하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예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요! 예우란 말만 빼요!」 하는 이 있음)

(○채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진상을 규명해 놓고 사법처리는 나중에 하든지 않든지 하자는 것 아니요! 진상도 규명 않고 사법처리 않는다는 얘기만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장내 소란)

○부의장 노승환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을 할 때는 말이야!

의장이 할 테니 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조금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법무부장관 허형구 그다음 총리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김운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이 미국 뉴저지주에 200만 평 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설에 관해서 어제 질문하셨는데 우선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총리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작년 3월 새마을비리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 전경환을 비롯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재산도피 의혹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경환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미국 인터내셔널 플라우어 트레이드 빌딩에 300만 불을 투자하고 코네티컷주에 550만 불 상당의 골프장을 구입하였다는 등 7, 8건에 달하는 해외재산도피설이 파다하여 이를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전경환이 1988년 2월 5일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리빙스톤에 대지 300평, 건평 45평의 단독주택 1동을 19만 8000불에 지인인 전창기와 처 손춘지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외국환관리

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전경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전경환이 뉴저지주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설에 대하여도 조사해 본 결과 그 농장의 주인이 전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전경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전 씨가 도대체 누구예요?」 하는 이 있음)

그 전 씨는 전경환 씨와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저희들이 아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장도 그때 검찰이 조사한 바 있는 그 농장이 아닌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외무부를 통하여 호주 등 국가에 해외재산 관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앞으로 정확한 자료만 발견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수사를 계속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더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자료만 오면 언제든지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무슨 근거 될 만한 회답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부동산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관계가 되어서 소관부처가 총무처장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정원식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홍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먼저 이 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나고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거듭하면서 적지 않은 대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것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질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민주화와 자율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격랑 속에서 적지 않게 교육의 결손을 가져온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문교행정의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으로 문교행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 기회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와 학생 비율을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생과 교수의 비율, 즉 1 대 32라는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는 대학의 질을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학의 수학과정에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의 교양교육은 너무 도구과목 중심의 타성적인 교양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타성적인 교양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교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대학교양교육의 한 모형을 개발해서 이것을 대학에 널리 보급하고 권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도서관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대학의 상징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 영세한 도서관을 확충해서 보다 몇몇한 도서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체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교육공학이나 새로운 정보산업을 교수체제에 도입을 해서 교수방법도 쇄신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면학분위기와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조성비를 매년 늘려가는 일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0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190억을 가지고 대

학의 연구분위기를 이룩하는 데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보다 앞서 있어야 할 일은 대학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원의 안정 없이 대학의 질의 향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데 저희로서는 온갖 힘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내의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원칙을 고수해서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교시책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홍만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이번에 대학생의 과외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문교부는 과외금지 조치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교육심의회 의 건의안과 여러 가지 여론들을 참작해서 지난 2월 2일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방학 중 학원 수용을 허용하고 대학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 직업적 과외는 계속 금지하며 방학 중이라도 교원과 학원장사 및 일반인의 과외교습은 계속 금지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외완화방안의 기본원칙은 두 말할 필요 없이 학생들의 배우려고 하는, 학습하려고 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또 동시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며 이와 더불어 과외과열현상의 재발을 예방하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과열과외의 예방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입시 위주의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과외가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제방법을 개선하고 대학입

시 전형자료는 지식 중심의 학력 위주 평가에서 특별활동이나 행동발달상황 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활용해서 전인적인 평가로 전환시키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고 VTR 자료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해서 과외학습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완수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TV 교육방송 시간을 연장하며 VTR 학습자료와 학생용 자율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저러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농촌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VTR 자료를 중심으로 널리 보충수업을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물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단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이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충조 의원님의 정성 어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역시 과외허용에 대한 사회적 리적 현상 대책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충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김홍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그런 단기대책만 가지고 이런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대책을 저희는 사회 경제적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이호 의원 의석에서 —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쫘 되면 읽지 말고 하세요!)

예, 별로 많이 보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력 중심의 풍조에서부터 좀 더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요 또한 둘째는 학력 간에 균등한 고용정책을 촉구해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이요, 셋째는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므로써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과외문제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충조 의원님께서 교육방송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과외에서 입시 문제의 적어도 20% 내지 30% 비중의 출제를 할 것을 고려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교부 관할의 독립된 교육방송국 설치와 전용채널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교육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문교부 또 체신부 등과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방송을 보강할 경우 대학입시 출제에 방송강좌 내용 중에서 일정 비율을 반영시키는 문제는 현재 입시문제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더불어서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충조 의원님께서 세 번째의 질문으로써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을 구제함에 있어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 중 일부는 구제받지 못하였다는데 이들을 구제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87년도 즉 제2차 학생 구제할 때에도 학생활동과 관련된 학생은 거의 전원이 구제되었지만 1차 구제 때, 즉 1984년도에 있었던 1차 구제 때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자 중 징계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지 않은 균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각 대학에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질 관리 측면에서 학칙으로 재입학을 불허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88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입학정원제로 바뀔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생기고 여석이 있을 때에는 재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교부에서는 이들이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조 의원님께서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배정에 있어서 8학군 학생을 9학군으로 배정함에 따라 9학군 학생이 타 학군으로 밀려 교통이 불편한 강북으로 배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기 주간고등학교 학생의 타 학군 배정은 학

군별로 수용능력과 수용대상 인원이, 즉 합격된 인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9학군뿐만 아니라 모든 학군에서 타 학군으로 배정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학군 배정 시에는 가급적 교통편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학군 학생의 강북배정에 있어서는 전원을 가장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에 국한한 것도 사실입니다. 8학군에서도 2109명이 강북인 용산 성동구 등으로 배정되었으며 특정학군의 특정학생만이 타 학군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홍만 의원님과 김충조 의원님 두 분의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문교장관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부장관 김집** 체육부장관입니다.

김홍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88올림픽의 대성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홍만 의원님으로부터 올림픽의 총결산 시기와 잉여금 총액 그리고 사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 총결산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림픽조직위의 청산일인 금년 10월 2일까지는 명확한 결산수지의 내용 제시는 어려우나 추정 잉여금액은 86·88선수촌 웨밀리타운 등 아파트기부금 1315억 원, 재일교포의 성금 등 613억, 조형작품기부금 90억 원, 합계 2018억 원과 TV방영권, 주화 휘장사업, 입장권 수입 등 사업잉여금과 그간의 은행이자를 합하여 502억 원이며, 총 합계 25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OC 헌장 제10조에 올림픽대회는 IOC의 독점적인 소유물로서 올림픽대회 개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잉여금은 올림픽운동의 진흥 또는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IOC 헌장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전국 각지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착실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

원에서 전 국민에게 그 잉여금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소극장, 전시장, 예식장, 청소년들의 모임의 장소, 체육관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 체육의 종합전당인 국민생활관을 15개 시도에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잉여금은 체육재정 자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조정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체육시설계획을 시도에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인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조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토록 정책을 전환하여 지역주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부터 이 정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호응하여 지방체육시설을 종래의 중앙부서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관례를 지양하고 체육시설의 설치허가권한 자체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체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육시설설치사용에관한법률에 이 의도를 살려 체육시설 설치허가의 권한을 시도시사가 가지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문태준**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류승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직업병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문제와 산업환자의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일반질병에 관해서는 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급여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 제도 사이에서 행정적인 책임전가로 인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산재환자 등의 생활보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산재보상제도를 내실화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기아의 해외입양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만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아 해외입양은 6·25 동란으로 인한 전쟁고아의 발생을 계기로 해서 58년부터 88년까지 총 11만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입양은 총 4만 1000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내입양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계혈통계승주의 등에 주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부진한 실정에서 해외입양은 기아들의 개인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의 체면을 생각할 때 국내입양 위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불우아동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 육성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입양대상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기아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서 미혼모의 발생 예방사업과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입양 알선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머지않아서 정책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열 입양경쟁을 지양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해외입양 인원을 국내입양 실적과 결부시켜서 운영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국내입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금년부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의 지원책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입양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께서 퇴폐적인 향락적인 소비문화의 만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도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 산업화 인구의 도시집중의 부산물의 하나로써 발생하는 향락성 소비문화는 많은 선진국가들이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불건전한 문화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치 못한 퇴폐성 소비성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사회부뿐만 아니라 문교부, 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협의체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이에 관한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사업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 기타 문화사업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 향락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풍속사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같은 것을 입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폐행위는 단속 위주보다는 선도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과 선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께서 종합병원의 병상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이 조기에 확대 실시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는 국민의 전문치료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서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대도시 지역의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의 병상이 현재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각급 학교가 방학기간에 들어서서 입원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총 병상은 10만 6000병상으로써 이는 인구 10만 대 396병상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종합병원급은 약 56%인 5만 8000병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상규모는 앞으로 증가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검토되어 온 의료전달체계를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더불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합병원의 환자폭주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85년 이후 대도시지역의 의료시설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실시되어 온 병상신·증설의 제한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대진료권단위로 의료수요를 감안한 전문병상의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병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소규모 병원에도 환자가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영시설에 의존한 경로우대증의 개선방안과 노인복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로우대증의 개선문제는 김한규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자 80년 5월부터 공영시설 6개, 민영시설 7개 업종에 대해서 실시해 왔으며, 그동안에 저소득계층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민간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두고 시비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민간업체는 노인 이용을 기피하는 등 현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제 노인의 복지시책은 정부재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궁, 능원 등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민영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쿠폰제 실시, 노인수당 지급 등의 여러 방안을 선진국의 예와 우리나라의 대한노인회 등 여러 노인단체와 협의

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먼저 가정에서 노인봉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미비점은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가정봉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효행자 포상과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상속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매년 20만 명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소득보장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취업알선을 강화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증설하며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노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노인에 대한 가정보호사업을 실시하고 가정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유료 양로시설 등 복지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대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법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노인복지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다가오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한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수준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자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89년도 생활보호 수준이 거택보호의 경우에는 1인당 월 3만 6000원,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생계비 지원 수준을 메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생계비 계치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의 조속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첫째, 자녀학비 지원대책을 의료 부조자까지 확대해서 88년에 29만 명에서 89년도에는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업고등학교까지의 학업을 보장하고,

둘째로 직업훈련도 88년에 8000명에서 금년에 1만 2000명으로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셋째로 생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을 88년도에 300만 원에서 금년에는 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 조정하여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는 종합복지관, 탁아소 목욕탕 등 주민복지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해 나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상담 그리고 자립지원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및 보호대책, 시설퇴소아동의 보호대책 그리고 결연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됨으로써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기아발생과 결손·빈곤가정아동이 증가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보호아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 먼저 미혼모 발생의 예방교육을 가족계획과 연계시켜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혼모의 사생아 발생을 방지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직업보도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자립정착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을 88년에 서울·부산지역에 설치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빈곤가정과 690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을 위해서 상담사업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보호, 교육비의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우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은 현재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3만 7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연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기업이 아동시설 또는 불우아동들과

결연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등록의 내실화 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향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등록사업은 정확한 장애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등록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실시해서 금년 1월 말 현재로 15만 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 부진한 실정을 감안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시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문공보, 안내문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읍·면·동에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아울러 순회진료반을 편성해서 거주지에서 무료로 장애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의 등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보호장비의 지원, 복지시설에 입소 그리고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을 포함한 의료보장, 자녀교육비의 지원, 고용촉진 등의 전반적인 복지대책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의 복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련된 이 대책위원회에서 각종의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장애인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이 문제를 조치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재원조달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전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 교육, 취업 등 16개 분야에 걸쳐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현재 대책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자의 복지대책은 우리 보건사회부의 중요시책의 하나로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모자복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생활보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74만 명의 모자세대가 있으며 이 중에 8만 세대는 생계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이 없이 어머니와 아동만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이들 모자세대는 어느 계층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생계가 곤란한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취학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취업훈련과 주택자금, 사업자금 대여 등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립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 등에 수용해서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복지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모자복지법이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모자복지를 위한 시책들을 충분히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역의료보험조합마다 전산시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은 보험료를 사업주나 정부기관이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과는 달라서 조합에서 가구별 소득, 재산,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험료를 고지하고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 요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보험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관리운영비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

협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총 재정 중에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합운영의 합리화와 또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운영이 정착되면 그 비율은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마다 전산시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 이동이 빈번한 가입자의 관리, 소득 재산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관리 그리고 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업무가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고, 가입자의 급여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보존의 필요성과 추이 분석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처리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계획을 보면 조합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 국민 연금확대 시책과 연금기금을 국민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일시에 당연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의 또 도시의 자영업자들의 소득과약이 현재 불가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과약과 징수가 간단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연금확대에 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과 학계에 연구를 의뢰하고 있으며 그 연구가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해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댐의 건설을 위한 금호강 수질악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강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질오염이 대단히 높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천댐 건설 이후 방류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금호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폐하수물이 그

배출량이 낙동강의 수계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강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하댐으로부터 금호강까지 도수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병행해서 달서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대폭 확대해서 또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금호강 일대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종합 일원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우리나라의 GNP가 불과 944불인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며 단시일 내로 빠른 속도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동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 종합방식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실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99만 명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10여 년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고 이를 개선하고 우선 전 국민을 의료보험 대상자로 넣는 문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를 해 왔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종합일원화주의와 조합주의의 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에도 두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험관리체계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쪽 견해가 상세히 진술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관리체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을 안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광역화 방안을 채택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료보험 운영의

기본방침은 첫째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료비가 GNP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경제여건상 결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료비가 GNP의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가 그 본질상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며,

셋째로 정부의 재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수혜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하에서 의료보험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합방식과 통합일원화 방식에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조합방식은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가 사업장과 지역 내에 국한된다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통합일원화 방식은 자영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보험료의 형평부과를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둘째로 도농 간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배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공평하게 급여를 받는 데 제약요인이 있으며 아울러 의료보험의 운영경험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전국을 통합 관리하는 대형조직으로 할 경우에 조직운영이 관료화 경직화될 우려가 또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조정과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서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시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지나치게 증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느 제도를 택하든 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우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농어촌의료보험을 실시할 때와 같은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공평하

게 급여와 또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결정해 나가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새로 실시된 전달체계에 있어서 종합병원의 직접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유층들에게 독점되어 종합병원의 이용에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으로 진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법령상 이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도에서는 진료비의 차등부과 개념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종합병원의 환자 폭주의 현상을 시정하고자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1차 진료의 필요에 따라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전국 어느 곳의 3차 대규모 종합병원에서도 진료가능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로 인해서 일반보험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보험환자들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는 한편 종합병원에서 보험의 적용환자나 자부담환자 간에 차별대우가 없도록 현재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자가 행방불명된 사실과 또한 정부가 이를 감추고 있는 양성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이즈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거나 또 이를 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양성자는 총 37명으로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에이즈 양성이라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격리해서 수용하는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단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지금 현재 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양성자는 특수업체부로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주소지를 이탈해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 소재를 탐문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본인이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건강 여부를 알려 오고 있으며 전화접촉은 되고 있으나 현재의 주소를 지금 밝히지 않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헌혈자 중에서 양성자로 판명된 자 1명이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 신원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주소파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에 있어서는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AIDS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수혈자는 AIDS에 감염될 우려가 전연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AIDS 양성자는 파악되는 대로 보도기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앞으로 AIDS 대책에 참고로 해서 더욱 완벽한 AIDS 환자의 관리와 예방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획만 세우요? 하는 이 있음〕

시간이 없어서 단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동부장관입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 최저임금 14만 4000원을 위반한 기업체 수와 처벌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89년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업자는 4만 5000여 개 되며 적용대상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

산하고 있고 그중에 32만 3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9년도 최저임금 위반실태는 현재 41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에 소극적인 업체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저임금 책정 시 노사정 합동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 반영할 용의가 없으시냐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저임금 심의 결정 시 활용하는 생계비 및 기타 참고자료의 조사 등에 노사정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기업의 불법폭력행위 및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당연히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과 처벌을 병과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교원 및 공무원의 노조결성 불인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제한은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제한이유로는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고 국가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과 학생교육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처우개선은 국가정책상 고려할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헌신하여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관계법상 특별히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동3권을 허용함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근거와 그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주요 방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5조에 의거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주요 방산업체는 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제한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 및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업체에 근무하는 병역특례자의 해고시 입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위산업업체의 종사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방위산업업체 종사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4년도부터 88년까지 산업재해자 수 63만 명 중에 반복형 재해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과 기계설비 등의 환경적 요인이 혼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반복형 재해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전체 재해의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교육을 확대하고, 노사의 산업재해예방의식을 고취시키며,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고, 직업병 및 재해다발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신설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중 자격미달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전국 38개 특수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격기준 미달이 5개 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고 법정기준에 적합하거나 중급속 등 전문적인 검사능력이 부족한 15개 기관은 의과대학부속병원 등 전문의료기관과 상호 기술연계체제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직업병연구소를 설치하여 특수검진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환자 중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숫자는 얼마이며, 산재 및 직업병환자도 의료보험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0년 이후 산재요양환자 중 자살한 환자 수는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또한 산재환자나 직업병환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으로 평균임금의 66%에서 86%를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 후 잔존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50일분에서 1340일분까지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정착기금대부, 자녀장학금 지원 등 각종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부의장, 김재순 의장과 사회교대)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담할 노동재판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절차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법률지식 부족,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확정판결 시까지 장시간 소요 등 문제점이 있어 근로자에게 현재로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 공히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현행 노동위원회 기구와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노사분쟁 해결에 전문성과 공익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노동심판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홍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 강제해직된 노조원의 보상 및 원직복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0년 당시 노동조합 감사결과에 따라 노조 임원직 사퇴와 더불어 소속직장을 퇴직케 한 산별노조위원장급 12명에 대하여 보상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소속된 다섯 분에 대하여는 80년 해직공무원이나 당해 기관 정화자에 포함하여 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관련부처와 해당 기관 간에 요청 중에 있으며 사기업체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자율정화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임원직만 사퇴하고 소속직장에 복귀토록 했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노총에서 그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에서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보상 등을 건의하여 올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 지표상 광주 및 서울지역 임금수준 내용의 허구성 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금년 1월 발표한 88년도 한국 사회지표상의 근로자 임금수준에 있어서 광주지역이 46만 4000원, 서울지역이 43만 1000원인데 그 근거는 87년도에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만 광주지역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저임금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김홍만 의원님께서 북한자료를 언론에 공개해서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해서 국민들의 호기심을 해소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과감하게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공개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물이라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일방적인 선전물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개하는 데는 그만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 의원님께서 북한서적 출판허용과 단속한계가 무엇이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약 70종의 북한 관계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현

재 김일성대학에서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는 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0종의 책 중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이 4종입니다. 나머지 22개 종류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은 아주 쉽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책을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어느 책은 국민이 그냥 보게 해야 될 것인지의 한계설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학문연구 차원의 출판활동은 적극 보장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활동에 적극 동조하거나 폭력민중혁명을 선동하는 서적, 좌익적 시각에서 역사를 왜곡한 서적,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서적, 북한의 사회상을 일방적으로 과장 왜곡하거나 북한체제나 제도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서적, 기타 북한의 적극적 선전자료를 그대로 전제 배포하는 이런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부 안에서 항상 신중한 검토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민간방송 허용 용의에 관해서 역시 김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방송제도는 공영방송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방송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KBS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라든지 또는 우리도 조만간 케이블 TV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등등 여러 가지 방송에 관한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공영이나 민영이나 하는 데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언론계 내부에서도 방송의 광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문제를 이제 한번 검토할 때는 되었다고 정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몇몇이 앞서서 이 문제를 간단히 다룰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보부에서 연구 중입니다마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서 국가

방송발전제도연구기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폭넓게 시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민방도 좋고 현재 제도의 존속도 좋습니다. 저희로는 그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존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다음 또 역시 김 의원님께서 미국 UIP 영화 직배 황포로 방화계가 설 땅을 잃고 있고 방화계의 소생과 방화가 영화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UIP 직배를 유예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유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영화가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미국의 영화사만 문을 열어 놓고 정부는 팔장 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산영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서 25억을 우선 지원해 주셨고 또 극장에서 모금하는 문예진흥기금 중에서 금년에 40억 원을 국산영화에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산영화를 정부에서 잘 만들도록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민당의 김충조 의원님께서 1980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종교대책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있느냐, 소위 순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 자신 이것은 질문을 주신 뒤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80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은 당시 계엄하에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하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엄을 해제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엄시 종교계로 하여금 사회안정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어를 상당히 과장 표현해서 순화 등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또 김충조 의원님께서 지난 2월 3일

MBC TV를 통해 방영된 '어머니의 노래'에 대해 정부가 사전규제를 획책했고 방영 이후 공정성 결여 운운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진정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4일 본회의에서도 평민당 이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 답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대한 어떤 간섭이나 개입은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 언론에 간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냐 하는 데 대한 이것은 엄숙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MBC의 경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간섭이다 개입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 사전에 MBC에 한 번 또 방송위원회에 한 번 사전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한을 보낸 것은 주지하다시피 사실입니다.

또 방송 끝난 뒤에……

(○김주호 의원 의석에서 — 공정성을 기하려는지 앎을지도 모르면서 먼저 서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 프로가 공정치 않다는 뜻의 공한을 MBC에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 프로가 공정치 않다고 봤느냐, 공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각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고 또 직업적인 우리 언론계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주호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안다 말이에요? 광주사태를 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 한 구절을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8조는 '방송은 대립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문제를 공정한 관점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위원회는 2월 10일 자로, MBC 방송이 물론 있는 이후입니다. '어머니의 노래' 방영에 대해서 대립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화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높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준상 의원 의석에서 — 그 공한을 무슨 근거로 보낼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어머니의 노래' 차원의 방영물 등을 앞으로 일정 시간 전 국민에게 집중 방영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일환책으로 삼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조속히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지되어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광주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조사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치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MBC가 방영한 프로그램은 광주문제에 대한 한쪽의 주장만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난 8년간 피해자 측이 침묵을 하고 가해자 측의 주장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년 동안은 오히려 피해자 쪽의 얘기가 보도가 돼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난 8년간에 가해자 쪽의 얘기만 보도됐던 것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피해자 쪽 얘기만 보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순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김용갑 총무처장관입니다.

평화민주당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년 해직공무원 보상과 복직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80년 해직공무원 처리문제가 지난 한 해에 원만히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해직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 일반국민과 재직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필요한 예산 965억 원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뒤이어서 해직자의 전월 소급복직과 해직기간 보수 전액 지급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동일사안에 대한 2개의 방안이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해직공무원의 아픔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에 준하는 봉급 50%의 보상방안으로 확보한 965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보위에 파견되었던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의 명단을 밝히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무처에서는 그러한 명단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관 이…… 문공부장관부터 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공갈치러 여기 온 것 같은데 주의 좀 줘요!)

○의장 김재순 의장이 말 안 할 때는 말 안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야유하시는 것은 좋은데 야유라는 것이 때때로 청량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남 얘기에 방해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총무처장관

이 공무원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아까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넘김디다마는 답
변을 안 듣고 넘어가려고 해요?)

보충답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의원들께 오늘 대정
부질의 답변이 끝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여러분 충분히 참작하셔
서 좌석에 많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김태호 의원 나오서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민주정의당 울산시 중구 출신 김
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
분!

연 4일 동안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나라를 위
한 대정부질문과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에 대해서
경청해 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
다. 이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가 진실로
지난날의 족쇄에서 풀려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민주전당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세계를 급격히 빠른 속
도로 변화하는 사회라고 특징짓고 있습니다. 우리
의 사회도, 우리의 주변정세도, 우리의 생활환
경도 자칫 균형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최고의 동서화합을 이룩한 인류의
축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여세로 몰아
북방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을
남북공동 개발한다는 낭보를 접하고 눈앞에 다가
올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가
슴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10% 이상 유
지하면서 국제수지를 흑자로 기록을 했고 국민총
생산규모가 1200억 불을 돌파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 노태우선언으로 40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실현하고 모든 분야
의 민주화가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등 실로
격세지감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경제적 기적을 바탕으로 정치기적을 이룩하였
으며 외교적 기적을 견인차로 하여서 반세기 남
북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신화를 창
조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입을 모아 평가하는 이
코리아의 기적에 심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앞에 닥친 갖가지 시련과 도전들이 우
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소득수준 3000불대를 맞이
하여 계층 간의 갈등과 상대적 빈곤의식은 물론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더 빨리 더 넓게 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날 권위주의하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감정들
이 일시에 분출함에 따라 사회안정을 밑바닥으로
부터 뒤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주화와 자율화를 빙자하여 불법과 무질
서가 도처에 횡행하고 과격 폭력시위가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범죄가 극심하여 안정된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지에서 싹튼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세력이 민주
화란 가면을 쓰고 확산되고 있어 체제유지에 적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흑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민주화로 가는 전
환기적 진통이라고 자위하려 들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지혜
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눈앞에 다가온 선진국
이 아니라 중남미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역경을 맞게 될 것입니다.

피와 땀과 희생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체제
까지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복지와 개발, 성장과 분배
라는 보약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질
서의 확립과 폭력의 추방, 인내와 자제라는 응급
조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할
명분과 논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폭력과 무질서,
궤변과 선동이 민주화의 수단이요, 본질이라는
일부 계층의 망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혀
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 의원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생치안 문제, 집단폭력시위 문제, 자유민주주의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묻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민주치안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정부 당국에서 많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사회에는 흉악범이 급증하여 치안부재를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폐강도라는 신종어가 생겨나는가 하면 대낮에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고속버스에 강력범이 활개 치는 모습은 마치 서부활극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팔고 산다는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서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는 시간당 범죄와 테러가 100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 50%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당국의 조사통계는 오늘의 불안한 민생치안을 실감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해야 할 우리 생활이 범죄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공권력의 신뢰는 물론 정부의 신뢰마저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치안종합대책실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국민 앞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성장에 치중해 온 나머지 치안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범인은 자동차로 달리는데 경찰은 뛰어가야 하는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인력의 증원은 동결해 둔 채 의무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인력의 숫자만 늘렸을 뿐 전문성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경찰서 지·파출소의 증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억제해 온 것들이 바

로 비판의 대상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증원과 체제의 정비는 물론 경찰의 기동력과 통신장비 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급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등 긴급 재원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감한 조치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경찰의 사기진작과 공권력 신뢰회복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선 경찰관의 사기가 민생치안대책의 요체라고 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파출소가 화염병에 의하여 불에 타는 등 무력해 보이기만 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범인을 잡아라,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호통과 지시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여의도 농민시위는 300대의 버스에 죽창을 싣고 1만 2000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출발했는데 현지 당국에서 설득이나 단속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를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하부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마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박봉에 허덕이는 일선 경찰관의 생계에 대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공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경찰의 사소한 과실은 너그러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무부장관이나 치안본부장뿐만 아니라 국민도, 여기에 자리를 함께한 여야 의원 모두도 함께 걱정해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퇴폐성 유흥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음란비디오와 나체쇼가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까지 성행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휴식처가 되어야 할 위생업소가 음란장소로 변질하여 범죄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국적 범죄인 마약사범을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다음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교도행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만들었던 호

송범인 탈주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권력의 실추와 무기력을 질타했습니다.

탈주범들의 입을 통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충격적 용어가 세상에 알려져 교도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도관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양양대책, 범인수용 질서확립 등의 대책이 국회에서, 언론에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교정행정에 대한 개선책이 어떻게 강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범죄예방과 추방을 위하여 범국민적 협조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증원한다, 장비를 보강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선량한 시민이 강도를 당해도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오늘의 시민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 비명을 질러도 자기 집 문만 걸어 잠그는 야박한 민심은 어디엔가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어느 조사에서 ‘범죄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가 넘는다는 통계는 민생치안의 실상을 실감 있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정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사회적 계도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경활동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겠습니다.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집단시위가 또 하나의 사회불안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공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고 공권력 앞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의 기본은 법과 질서의 존중이기에 불법 집단폭력시위는 반민주적 행위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되고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시위와 집단폭력시위는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가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지방순시를 폭력으로 방해하려 들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공시설이 점거당하는가 하면 학사를 다루는 총·학장실이 점거 파괴되고 시위대가 군수를 대창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검찰청과 법원이 화염병에 불타는 현실을 어느 양식 있는 사람이 민주화로 가는 전환기적 현상이라고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구내까지 집단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민주화란 미명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40년 헌정사를 통해서 4·19나 10·26을 거치면서 법과 질서가 파괴되는 혼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처방은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인 모두가 함께 자성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초미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불법 집단폭력시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 불타는 여의도를 보고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공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배후세력을 차체에 철저히 가려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처리를 놓고 일부에서는 구속자를 내놓아라,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는 태도표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화를 하자는 것인지, 폭력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폭력시위의 필수적 도구로 일반화하고 있는 화염병의 심각성과 그 근절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는 화염병 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60년대 말 일본 좌익세력 폭력절정기에 화염병 투쟁시대라는 용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염병은 2차대전 시 프랑스가 독일군에 대항하기 위한 대전차 공격용 무기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커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인 대물 살상용 무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야 공동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화염병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의원은 경찰병원을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한 화염병 피해 환자들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염병에 대한 피해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상 화염병 사용시 처벌법규는 무엇이며, 그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정부가 제출한 화염병 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던지면 화염과 고열, 폭음이 발생하는 고성능 신종 화염병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경폭력 체제전복세력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폭력에 의한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학원과 노동현장에서 김일성찬양 대자보가 나붙는가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낡은 고전이 되어 버린 계급투쟁이론에 심취하여 폭력혁명을 부르짖고 한미 간의 협력을 제국주의나 종속이론으로 오도하는가 하면 체제수호세력을 적으로 단정하는 일부 과격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민주화를 내세워 현 정부의 타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체제전복세력까지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명백하고 확고한 의지와 태도가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길을 넓힌다는 구실로 좌경폭력세력의 활동무대를 동시에 열어 주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의 개정과 폐지, 제도의 개선도 정부조직의 손질도 이 점에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길을 닦는다고 제방을 허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조금 전도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24시간 쏘아대는 북으로부터의 폭력혁명 선동전파매체와 홍수처럼 불어나는 폭력혁명 선동간행물에 대한 대응책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남북 간의 체제우월성에 대한 경쟁은 우리의 우월성으로 판가름이 났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가에는 이미 학술적으로 설득력을 상실한 막시즘이나 계급투쟁이론이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권력 회복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책임회피적 자세가 문제 되는 소리가 높습니다.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근무자세와 사기양양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날의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자치에 필요한 여건과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의 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치기반을 얼마나 튼튼히 마련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의 통치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자치사무는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중앙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총체적 이양 없이는 자치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지방에 권한을 빼앗긴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 추진은 미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총체적 이양을 위해서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담배판매세 1조 3000억 원을 지방에 이양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불과 5%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평균 58%였으나 단체 간의 불균형이 심해서 자주재원으로 봉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104개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자치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을 가진 세목의 지방세로의 과감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세 신설, 교부세율의 인상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조정 작업의 진척과 그 내용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계층구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가 많다는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와 행정구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행정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자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화와 행정능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주화만 외치다 보면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어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주민 직접 선거한 시읍면장이 4년간에 80%가 교체되는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연간 207일간이나 개최되어 행정마비를 가져온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분위기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세력 확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주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파장에서 벗어나야 제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나 표시제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의원 90% 이상이 무소속이라는 선진의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정치에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지역당의 성격을 탈피하는 문제이고 지역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당, 지역감정을 더욱 노출시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이 한 해가 또 13대 국회가 서두르지 말고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가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가 깊숙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다수가 최대행복을 누리는 복지시대와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를 합해서 정진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평화민주당에 소속하신 정균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환 의원 평화민주당 전북 고창 출신 정균환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이 비로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재의 길고 어두운 터널

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1989년의 한국사회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고자 하는 위장된 보수세력과 반독재 민주세력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은 끝내 희망에 찬 정의와 평화의 시대를 걸어나갈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25년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들이 어떤 음흉한 계획을 꾸미더라도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통일을 회구하는 사천만 국민의 염원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민중의 생존권을 위압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완성과 번영을 갈망하는 이겨레의 위대한 전진을 결단코 막을 수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한국사회에 네 가지의 심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권력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군사문화의 독소적 유산이 이 나라 자본주의의 도덕적 타락과 결합하여 갖가지 모순과 비능률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이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의 사회·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파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날 국가공권력의 위기는 가히 민생치안분야에서 무정부상태를 연상케 하는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부녀자 인신매매나 마약범죄 같은 극악한 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치안기능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적어도 국민의 눈에 전두환 정권 시절과 다름없는 정권안보를 위한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 공권력 행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가공권력의 도덕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권력 행사가 역사와 국민보다는 정권안보와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대통령 특별지시를 통해서 이제는 사회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히고 이를 거듭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풍산금속과 현대테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풍산금속에서는 22명의 농성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서 무려 3833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폭력조직을 조정하고 방조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현대노조 테러에 대해 치안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윤섭이 온건세력 100여 명을 규합해 가지고 과격세력 수십 명을 야구방망이, 곡괭이자루 등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과격세력 수십 명이 좌경의식화집회를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폭력배들을 온건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노동자집회를 좌경의식화집회라고 보고 있는 이 왜곡되고 뻔뻔해진 관점이 바로 치안본부의 시각인 것입니다. 야구방망이와 곡괭이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지금 치안당국에 구금된 사람들을 온건세력이라고 하고 또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과격세력이요, 좌경의식화집단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는 현대그룹 노동자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보고 있는지, 풍산금속과 현대테러의 경우 국가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보는지 또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일선 경찰서장 정도만 저야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지난번 내무·노동 연석회의에서 구정 전까지 풍산금속의 조업재개를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업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고 지금 조업재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김근태 씨 등 민주인사를 밀실에 가두어 놓고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근안 경감에 대해 묻습니다.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을 검거하는 문제는 우리 경찰이 민주경찰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일제하의 고등계 형사 같은 국민의 불신과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되느냐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본 의원은 이근안 경감을 법의 심

판대에 세우지 않고는 경찰의 권위는 물론 공권력의 도덕성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떠한 국민도 이 나라 경찰이 이근안이 한 명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문제입니다.

기획원에서 발표한 88년도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도와 절도를 당하고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8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드러내는 통계인 것입니다. 또 100가구 가운데 15가구 정도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한마디로 이 세상은 무법천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국치안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생, 노동자, 재야인사를 붙잡고 감시하는 이른바 정권안보에만 경찰력을 쏟다 보니까 이렇게 민생치안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84년에는 특진자 중 수사경찰이 32%였는데 88년에는 19%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과 포상에 있어서 과거 정보경찰 위주로 짜여진 관행을 바꾸고 경찰 내부의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일신해야 합니다. 장관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공화국 군부독재정권의 강권통치가 부른 의문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회관에서는 의문사의 유가족들이 무려 닷 달 동안이나 장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35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강제징집에 의한 녹화사업 희생자와 부재자투표 후 자살처리된 사람 등 군대 내에서 19명이나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하던 청년들입니다. 이 모두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뚜렷이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그 시신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묘비명이나 무덤을 옮겨서 원혼을 달래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보아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이 대명천지에 나라의 장

래를 걸머져야 할 꽃다운 젊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며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독재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편성해 가지고 이 의문사 문제를 파헤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알리고자 했던 박창신 신부에게 공수부대원으로 짐작되는 폭도들이 테러를 자행했던 사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성한 사제관에서 자행된 잔인하고 비열한 테러와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장소였던 전주 전동성당과 군산 오룡동성당에 대한 방화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정부 당국은 극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광주항쟁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장관은 수사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진상규명대책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화염병을 제조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유신치하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규제만능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근본대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마치 학원안정법을 만들면 대학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과거의 잘못된 발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집단행동과 화염병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민주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여의도 농민시위와 같은 극한투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오히려 무차별한 최루탄 발사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를 죽이고 부상자를 양산해 내는 최루탄 사용을 억제하는 길이 바로 화염병을 금지하는 법보다도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장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시내 최대의 유흥가인 이태원에서 '양키

고 흠'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운동권의 구호가 아니고 미군들의 폭력에 격분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미군범죄 즉 절도, 강도, 부녀자폭행, 살인, 폭력, 마약복용, 사기 등등이 67년부터 87년까지 20년 동안에 무려 3만 9452건이 4만 5183명의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그들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한국정부가 겨우 0.7%밖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탄압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 노동행정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부를 노동자탄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기구의 정당성을 흔들며 놓는 일이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대우 같은 재벌기업의 노동자탄압정책과 거기에 돌아나는 노동행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작성한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경영'이라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위 '노무관리지침'을 보면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은 바로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간관계의 파탄을 가져오며 조직의 분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소위 비노조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노동행정은 민주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일이 그 본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정책은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주들의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은 기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밝혀 주시고,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 탄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장폐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한순간에 수백 명의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가장 지능적인 노조탄압이 바로 위장폐업입니다. 직장폐쇄가 87년에는 5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1년 만에 2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용자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노조와해수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장폐업이 겉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부는 폐업철회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에 서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과 풍산금속에서는 쟁의 중인 노동자를 해고해서 곧바로 병역특례를 취소하고 징집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3조4항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정부가 운동권학생을 강제징집으로 학원에서 몰아냈듯이 최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을 병역특례 취소라는 행정조치로 통제하려는 것은 제2의 강제징집이며 앞으로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노동자탄압 문제입니다.

한국 모토로라, 슈어프러덕츠, IBM 등의 한국인노동자들이 민족자존과 노동권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은 오히려 이들에게 탄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은 지금 11만에 달하는데 그중에 5만여 명 정도가 소위 '닭장집'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평의 방에 부엌이 하나 딸리고 화장실은 수십 가구가 공동사용하는 이 닭장집은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또 겨울에는 연탄가스 걱정을 하면서 그저 목숨만 부지하도록 되어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고기 한 근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적금을 붓지만 막상 그 적금을 타고 보면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불과 30여 평의 기숙사 속에 8개의 방과 세면실 그리고 대기실로 나뉘는 그곳에서 일에 지쳐 곤히 자던 여공 22명이 불에 타 죽고 만 안양 봉제공장의 화재참사를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참혹한 주거환경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노동자들의 눈에 평당 600만 원짜리 고급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최저임금 14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한 평을 사기 위해서 고스란히 모아도 3년 5개월이나 걸리고 이런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라도 사려면 68년, 즉 평생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사람들의 절망이요, 복지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2년까지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편의를 위한 상품주택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백지화하고 10평 내지 13평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관리비도 저렴하게 책정해 가지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주택정책은 포괄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조치로 올 봄 임금협상에서도 주거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의 농촌경제는 가히 파탄의 지경에 와 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죽봉까지 들고 일어서는 동학농민혁명 이래 초유의 농민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단순히 대학생이나 재야단체세력이 농민을 부추기고 의식화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간단히 보아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농민시위는 농촌에 봄은 오고 있는데도 무슨 씨앗을 어디다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농민의 절망감 속에서 온 것이지만 단순히 수세문제와 고추가격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 농민시위에 관한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치안본부에 들러 참을 만큼 참았

다, 강력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내무부장관을 잡아 치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농민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만 했을 뿐 일국의 정권담당자로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또 그런 사태의 근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권담당자의 시각 때문에 농촌은 더욱더 피폐화되고 희생불능의 도탄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진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죽어 가는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허덕이는 농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민대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혁신적이고 자주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농민을 희생시키는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농촌이 잘살고 안정되어야만 국가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농어촌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복지정책 구상을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은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인데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복지정책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현행 농어촌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가 농민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관계장관께서는 소득에 따른 누진적 보험요율 적용을 서두르고 통합일원화를 시급히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인간화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군사문화의 청산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고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억압으로 점철된 분단한국사는 보다 열린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전투의 개념이 아니라 정의롭고 민주적인 평화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같이 민족의 용광로에 능히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부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민주정의당 인천 남구을 지역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4일간 대정부질의 중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재확인하는 뜻에서 명확한 답변을 총리와 국무위원께서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국민의 직접선거로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13대 국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온 국민의 기대 속에 6공화국을 출범시킨 지도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국가가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145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더욱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8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위대한 많은 업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잘못된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세계 50억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치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치권 안에 폭넓게 수렴되어 놀랄 만한 정치발전이 이룩되는 시발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29 선언 이후 급격히 분출된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1%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치민주화 못지않게 경제적 발전에서도 우리 모두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외교정책 면에서도 우리는 자부과 긍지를 가지고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북방외교를 전개하여 놀라운 변화 속의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소수세력이

집단농성과 파괴, 공공시설 점거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판단에 머물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고 목청을 돋우고 물리적 힘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된다는 극히 위험스러운 인식이 국민 속에 파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시빈민, 노사, 학원, 환경공해, 치안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산적한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몸살 정도가 아니라 합병증에 걸린 중증환자와 같아서 무엇보다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처방과 대책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13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나라 1000만 근로자와 그 가족 그리고 못살고 힘없는 서민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당면과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일생을 오로지 결백과 정의를 생활신념으로 살아오셨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정치적 경륜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최근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이 극소수이긴 하나 날로 노골화되어 가고 공산주의에 동조 찬양하는 논의가 아무런 제약 없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6·25 사변 당시에 열두 식구의 대가족의 생명을 공산당들에게 빼앗긴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적 갈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만 작금 우리나라의 좌경동조경향은 무엇보다도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빈곤의식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인천 남구에도 예로부터 산동네 달동네로 일컬어지는 서민집단지역으로서 송의동 109번지 수봉산 일대의 용현동 지역과 학익동의 서민층의 생활지가 있는데 이들 판자촌 한 가옥에서 7, 8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비참한 주거환경과 판자집 방 한 칸에서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빈곤의 현장, 소방도로는 물론 없고 그러니 자연 인간의 마지막 길인 상을 당하여도 장의 차마져 진입이 불가능한 현실, 거기다 34세대가

공동수도 하나에 목마름을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외면을 당하고 정부의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빈민에 대한 대책과 계층 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무주택자를 위한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저렴한 건축비가 고려되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공급을 확보하는 일이 보다 시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토의 5.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주택택지로서 전환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 싼값으로 주택공급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노사문제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의 협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노동행정반을 총리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경제부처의 각부 장관들이 협의하는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협의기구로 활성화시켜 노동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문제에 대해 거론코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총예산 중 근로복지비를 포함한 노동부 총예산은 0.59%에 불과합니다. 88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복권이 주택복권으로 환원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자금 마련책으로서 근로복지복권으로 전환하여 1000만 근로자들의 복지자금으로 운영케 하심은 어떠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4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어 총리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주식배당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 10%와 방위세 20%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토록 개정되었는바 현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장학기금, 복지기금, 퇴직기금, 신용협동조합의 기금 등 순수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마저도 그 대상이

되어 기금을 잠식케 하는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세계 면에서 비영리단체로 보호를 받고 있던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근로자단체의 순수한 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으로써 복지국가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범죄가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의 50%가 범죄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갖가지 형태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민생치안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 흉포화, 기동화되어 범질서와 치안력을 조롱하고 인륜과 인간의 존엄성마저 멸시하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그 범죄의 수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절대책은 어떤 것인지 민생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 사소한 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경범죄 위반사건이나 시효가 지난 전과사실 등에 대하여 몇 번인가 이 기록의 말소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컴퓨터에 그 기록이 수록되어서, 말소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국민적인 화합을 위해서 이의 즉각 시정이 요청되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견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갈협박의 전화공세를 펼치는 작태와 신성한 국회의 사당 앞을 농성장으로 만들어서 돌과 화염병 심지어 죽창까지 난무하는 현실, 공공의 건물이 마치 감옥처럼 철창문으로 보호되어야만 하는 지금의 이 현실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범질서 확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는 노사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노사문제의 본질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근로자의 인간존엄성 회복과 과실의 배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은 뒤로한 채 경제성장만을 위한 갖가지의 금융지원, 세제지원, 행정지원과 또 노사문제를 치안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공권력의 개입 등과 같은 구습이 경제성장 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전환한 6·29 선언 이후에도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노사 간의 갈등이 날로 심각한 현실임을 장관은 알고 있는 지?

더욱이 안녕과 발전의 기대 속에 맞이한 89년 새해 벽두부터 풍산금속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건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고 아직까지도 정상화되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7년 이래 노사분규가 빈발되면서 우리의 노동현장에서는 항상 폭력이 뒤따르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88년 한 해 동안에 1873건의 노사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금번 울산 현대중공업의 구사대 폭력사태로 인해서 23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들은 500명으로 정당방위위원회를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0만 근로자의 총 본산인 한국노총에서도 지난 1월 18일 산하에 있는 산별 노조에 행동대 구성지침을 시달하여서 50명 내지 100명 단위의 행동대를 결성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고와 복직의 상대적 주장과 구사대와 위장폐업의 시비와 논란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금년도 노사문제는 극한적인 폭력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법은 근로자에게만 준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와 사가 함께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정착, 평화적 노사관계 유지 속에 산업발전을 정상화시킬 청사진을 장관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금융기관인 노동금고 설립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근로자들의 협동심, 저축심을 함양시키고 생활자금과 주택자금, 자녀의 장학금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한 만큼 대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들의 금융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금융편의를 해결코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27년에 이미 노동금고가 설립되었고 1950년 이후에는 더욱 활성화되어서 전국 47개 현에 노동금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일본과 같은 맥락의 공경제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노동금고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금고의 설치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과 제반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 중에 특히 복수노조 허용 여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삭제,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단결권과 노동삼권의 보장강화에 대한 정부 측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근로시간에 대한 견해와 89년도 노사간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부의 행정지도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노동기구인 ILO 가입문제에 대해 언급코자 합니다.

ILO 가입은 노동정책의 향상과 근로자의 노동외교와 국제노동단체 간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노동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국력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어서 보사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에 의하면 그 대상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서 영세민 보호에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호대상자의 재산평가의 기준이 소액으로서 당초의 목적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재산의 평가와 월소득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써 영세민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확대방안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이와 관련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다고 울분을 했습니다. 분명히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신문과 잡지사 등이 난립하여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나

타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이버기자의 횡포와 허위증명서의 매매행위에까지 이르는 실태가 발생하여서 극히 일부 언론의 행위라고는 하지만 뜻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문화의 중앙집권적 현상을 방지하고 각종의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의 지방분권화를 과감하게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중에도 특히 TV에 대한 문화적 과급효과가 큰 점에 비추어서 서해안 낙도지역의 난청지역 해소와 북방정책의 수행에 대비해서 서해안 중심도시인 인천지방 방송국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현재의 문화공보부가 문화와 공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업무를 통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기능 확대 추세에 맞추어서 공보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개발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부를 독립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문화공보부장관의 말씀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육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수없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 두 가지만 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등학교평등화 시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21개 지역이 평준화 대상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197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의 성과에 비추어 보아 장관께서는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평준화정책의 부작용으로서 학습집단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경쟁의식의 상실로 학구열이 저하되었으며,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의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학교의 획일화로 전통이나 특성이 상실되었으며 특히 학군제의 역작용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 현상까지도 유발하고 있으니 장관께서는 학군제의 폐지를 단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로 오늘날 대학은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폭력과 독선은 물론이고 공산주의 이념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민주적인 이념이나 수단, 모든 방법까지도

정당화하려는 일부의 행동을 문교부장관은 언제까지나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입장이 곤란하거나 골치가 아픈 일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학에 떠맡김으로써 대학을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의 장래도, 민주화도, 교육도, 교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학원을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으신지, 진정한 학원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대학이 학문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 의장, 노승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민주화를 염원하며 삼권의 기능을 보다 확고히 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법부를 불신하여 입법부인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도 기능을 갖겠다는 것은 국회만이 만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욕의 탓인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며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 준다는 생각은 우리의 깊은 자성을 가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모독죄는 폐기되고 국회모독죄는 신설되어 우리 국회는 어떻게 투영될까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만일 우리의 국회가 계속 당리당략의 과거지향적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또다시 우리의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정의당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6·29의 민주화 약속과 양대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을 묵묵히 실천해 왔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의 타산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인내와 양보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경탄케 한 서울올림픽의 영광과 긍지가 우리의 민족적 긍지로 영원히 계승되고 문화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우리 자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세계문화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명감

으로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대정부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의 과단성 있는 해결뿐만이 아니라 민생의 안정과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됨으로써 가시화된 민주화의 의지가 현실로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노승환 오후에 세 분이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의원 꼭 하셔야겠습니까? 이것……

(○김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짝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아주 짝막하고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들여서 이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김 의원 답변은 세 분 답변을 하실 적에 같이 결들여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순서를 짜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불초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시다마는 여기에 일부 국무위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답변 중에는 동문서답식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짝막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어머니의 노래’에 관련된 MBC의 방영문제를 두고 여기에 관한 사전의 공정성 결여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문공부 당국의 공한이나 또는 사후에 공정성 결여가 돼서 유감이라고 하는 성명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데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 이외의 것들을 전부 제외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문공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은 정부 당국에서 국회의 권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정성의 정의가 무엇 이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중립적 영역에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식의 국어사전적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지 공정성의 정의를 요청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정성은 참고로 방송윤리위원회법에 ‘방송은 공정성을 결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행정부에 있다고 하는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답변인가, 본 의원은 나아가서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적으로 질문합니다.

문공부 당국이 ‘어머니의 노래’ 방영을 두고 사전에 공정성 결여 여부가 걱정돼서 공한을 보냈 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검열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어머니의 노래’에 접해 보았기 때문에 공정성 결여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런 나머지 공한을 보냈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 8년 동안 폐쇄상태에서 드러나지 못한 진리가 그것도 모처럼 공식적인 방송기관을 통해서 국민 앞에 제시되는데 그것을 격려하고 도와서 진실을 규명해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적 대화합을 이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그 방송을 방영해 주신 MBC 당국에 감사서한을 보내도 부족할진대 이를 항의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방송이나 방영에 있어서 사전 공정성 여부를 염려하는 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방영 뒤에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문공부 당국의 행위의 법적 근거는 또한 어디에 있는가, 초법규적 기능을 문공부는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망국적 병폐로 되어 있는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격차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길이 또한 시대가 우리에게 준 사명으로 생각해서 T·K사단을 거론했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마치고 제 회관에 갔더니 협박 공갈 전화가 몇 군데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저는 진정코 이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사실

을 질문을 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이 T·K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친여 기득권 확보집단, 친T·K 인맥, 이와 같은 것을 규합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 접하고 가칭 경신회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처음 듣는다고 하는 식의 답변이라도 있어야지 어물쩍하게 답변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의원은 80년 국보위의 상임위원 등등 여러 가지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국장급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재직자 내용을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5공의 단절 단절 하고 단절을 6공이 부르짖고 있지만 기본적인 5공의 틀, 5공의 판을 갈지 아니하고서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해질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셨기 때문에 도대체 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가, 틀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판별해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데 장관이 나와서 하는 답변이 미진해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언제까지 그 자료를 내겠느냐고 하는 얘기에 마치 국회의원 대하기를 우습게 대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점을 망각하는 자세로써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상당한 기간…… 무작정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설정해서 국회의장 앞으로 299명 국민의 대표자들이 다 열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덧붙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다음은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어제 있었던 김운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어제 보충질문으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음 김태호 의원, 정균환 의원, 이강희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임야의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토지에 관하여 안양시 등 관계기관과 이양우 변호사 등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토지는 총면적이 2만 6876㎡, 약 8140평으로 이창석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린벨트지역 내의 임야로 금년 1월 1일 현재 과세표준액으로서는 약 31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이 임야의 구입가격은 1600여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임야는 이창석 씨의 아버지 이규동 씨가 1978년 2월 아들에게 사 준 것이지만 이창석 씨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임야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그해 6월 10일 딸 이순자 씨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임야 내에 있는 단독주택도 1984년 4월에 이창석 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동안 세금도 모두 이창석 씨가 납부하였으며 임야대장에도 이창석 씨 명의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볼 때에 이 임야는 이창석 씨 소유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운환 의원 의석에서 — 총리!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소유자는 이창석이고 권리자는 이순자입니다. 그래서 이순자 앞으로……)

미비한 점은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민생치안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채용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근래에 들어 범죄가 늘고 그 죄질이 흉폭해져서 국민생활에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 정부적으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금 전 경찰력의 75% 이상이 민생치안활동에 투입되어 있으며 기동경찰 등을 동원해서 방법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비상근무를 무한정 계속 할 수 없어 일정한 기일을 설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치안 당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방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신매매나 조직폭력, 강도 등 주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검찰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중에 경찰관서를 증설하고 경찰인력을 1만 명가량 증원할 것이며, 시급히 필요한 경찰의 통신장비와 수사차량 등을 금년 중에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하도록 지금 관계부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과 함께 치안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 의원께서 범죄예방과 추방을 위해 범국민적 협조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국민의 자경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법집행을 공정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 특히 치안공무원들에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엄격히 지도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국민 자경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인식과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로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불법 집단폭력시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대한 의지 천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불법 집단폭력시위가 빈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여의도 폭력시위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

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폭력이나 집단행동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과격한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서 사회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생치안 노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중적으로 폐를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에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것을 기대하며 공권력의 행사를 가급적 억제하는 방침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폭력 파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배후주동세력도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 처리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물론 이것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평화적인 시위가 민의표출의 한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좌경폭력 체제전복세력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체제전복세력의 실상은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폭력혁명세력이 점차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세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심을 선동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민주세력과 폭력혁명 추구세력을 냉철히 구분해서 다 함께 분명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성숙된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체제수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상황과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행정구역의 개편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최각규 의원과 이재근 의원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같음코자 합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는 이양대상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균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 근로자들의 성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풍산금속 농성사건과 현대중공업 근로자 폭행사건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대그룹 근로자들의 성향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여하고 있는 귀중한 건설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근로자와 기업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기업공동체의 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노사분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이든 폭력 파괴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그룹 근로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체제전복세력으로 간주한 일은 없습니다.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다수의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근로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다량의 폭발물이 폭발될 수도 있는 등 엄청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근로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지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을 잘못해서 의혹을 초래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울산서 정보과장을 구속하고 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실시된 지 20년이나 되어 체결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고 또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동 협정을 개정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개정해야 할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미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권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격과 죄질,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나아가 미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미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주택건설 200만 호 계획을 수정을 해서 영구임대주택 200만 호를 지어 저소득근로자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여건의 개선이야말로 정부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1992년까지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4조로 추산이 되어 전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재정능력상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중 6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이를 도시저소득층 공단 및 광산근로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공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농어촌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구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14일 양경자 의원의 질문 시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어촌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92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 등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농촌공업화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의 도로, 통신,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분야에까지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해서 농어업을 수익성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편리한 생활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중에 있는 농어촌장기개발계획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빈민 대책과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도시저소득층 문제와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 견지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빈민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의료, 교육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우선 주택 면에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소규모 국민주택을 대량 건설 공급하면서 영세민 밀집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거의 재개발 위주에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경우 현지개발사업도 병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면에서는 금년 7월부터 도시지역까지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8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문화시설 등을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과감한 유인 정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도시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업 단지를 골고루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의 일부를 택지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공해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의 유지는 도시 기능적 성격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서민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5700여만 평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근로행정대책반을 개편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6·29 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

가 분출되고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원래 건전한 노사관계는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는 노사운동의 역사가 일천하여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다소 불안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동행정대책반을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대책반의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께서 근로자복지기금 마련책으로 주택복권을 근로복지복권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작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노총 등 근로자단체의 이자소득 등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술 문화단체를 비롯해서 노총 장학회와 같은 장학단체, 근로복지공사, 해외개발공사 등 순수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그 단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세토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칩니다.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총리! 서민주택 200만 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택지개발도 없는데 어떻게 200만 호를 짓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씀을 하세요? 200만 호를 지으려면 5700만 평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부의장 노승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500만 호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내무부장관 이한동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께서 일선 경찰관의 사기가 민생치안대책의 요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경찰의 사기진작과 경찰 공권력 회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일선 경찰관의 사기가 민생치안대책의 요체이며 경찰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폭력집단시위 등 불행한 사태가 빈발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열악한 근무환경 거기에 과중한 직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저하된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먼저 경찰관의 사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 성적 우수자에 대한 희망부서 배치, 5년 이상 장기근속 순경의 경장승진제, 특진, 포상제 등을 실시했고 또 실적주의 인사관리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관의 열악한 처우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기 위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도서벽지 근무경찰관에게 관사를 지금까지 약 420동을 건립해서 제공을 했고 금년도에도 36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취학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장학재단과 협의해서 88년에는 207명에게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89년부터는 치안본부 및 각 시도에 설립된 경찰 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총 39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파출소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조금 증액을 했으며, 지·파출소 요원의 대민활동비도 5만 원 정도로 액수는 너무도 미약합니다마는 인상을 하였습니다.

한편 무사안일의 풍토를 추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 상급자가 반드시 보호를 해 주도록 하는 지휘방침을 정해서 산하에 시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 사기진작과 또한 왕성한 근무의욕의 진작을 위한 방안을 계속 나름대로 연구 발굴해서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하루빨리 경찰이 헤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민주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이 하루빨리 대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내무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곧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화염병과 관련해서 현재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이유는 뭐냐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시위의 양상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과격·폭력화 되어 온 경향이 있고, 화염병의 투척행위가 거의 폭력시위마다 보편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1988년은 87년에 비해서 전체 시위건수는 약 0.8배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화염병 투척개수는 오히려 4.9배가 늘어났고 인적 피해도 3.5배로 늘어난 그러한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염병 투척개수를 4.9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발이나 했더니 35만 8000개 정도를 작년엔 투척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정법 체제하에서는 화염병의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용결과가 방화 치사상 또는 상해 등 범죄로 성립될 때에만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화염병이 형법상의 소위 폭발물이나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파괴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는 화염병을 제조, 소지, 운반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화염병 등 폭력 파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염병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1972년 일본국회도 4당 공동으로 우리의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률을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이 공동발의로 국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시킨 예가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신종 화염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제조방법은 빈 병 속에 휘발유와 황산을 3 대 1의 비율로 주입한 후에 봉합을 해 가지고 분말상태의 염소산카리와 설탕을 3 대 1의 비율로 혼합 건조시켜 스타킹에 넣어서 병 외피에 테이프를 부착해서 제조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화염병이 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형의 화염병은 실험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피해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성이 아주 화공약품을 배합한 까닭으로 인해서 아주, 위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화염병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예상할 때 그 별도의 법적인 규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장관! 최루탄도 지랄탄 있고 직격탄이 있고 사과탄이 있어요. 최루탄 분석이나 한번 해 보았어요?)

최루탄에 대해서……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화염병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최루탄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듣고……)

최루탄에 대해서 얘기 좀 나중에 하십시오.

그다음에 정균환 의원께서 화염병과 최루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화염병의 사용을 억제하는 길은 최루탄을 안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87년에 비해서 88년은 최루탄의 사용을 경찰이 엄청나게 억제를 했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등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최루탄의 사용은 가장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비에서만 사용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에는 88년에 비해서 최루탄을 많이 썼는데 화염병의 사용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88

년에는 최루탄 사용이 적었는데 화염병 사용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 좀 이 상관관계를 그 숫자를 가지고 또 그 당시 지난 2년간의 사회상을 비교해서 잘 연구 분석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철용 의원 의석에서 — 장관! 88년도 6·10 학생회담 때 96억 원어치…… 아니 87년보다 88년이 훨씬 더 최루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폭력……

(장내 소란)

○부의장 노승환 조용하세요.

○내무부장관 이한동 이러한 폭력집단시위에 수반되는 화염병과 최루탄의 문제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의 가장 징표가 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이러한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학원, 정치권, 사회지도층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그 근원적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루탄과 화염병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협 의원 의석에서 — 장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구타는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저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장내 소란)

○부의장 노승환 조용하세요. 답변하는데 듣고 그리고……

○내무부장관 이한동 제가 최루탄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씀을 했지요.

그다음에 정균환 의원께서 현대 근로자 집단폭력사건과 관련해서 폭력을 가한 측을 온건세력이라 보고서에 표현하고 피해를 당한 측을 과격세력이라 표현한 그 까닭이 뭐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대 근로자 집단의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치안본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인용하신 자료는 치안본부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진상조사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주모자인 이윤섭 등 사건가담자를

온건세력이라고 표현하고 피해자 측인 노조원 등을 과격세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 보고서에 기록된 표현 내용은 사건을 모의한 현대엔진 한유동 전무와 이윤섭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한 그 표현을 그대로 보고서에 인용한 것입니다. 흔히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관계자의 진술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사보고서 작성상의 설명의 편의를 위한 관행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께서는 그다음에 이근안 경감을 처벌 않으면 공권력의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 경기도경公安분실장 이근안 경감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함으로써 경찰이 이 경감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경감의 조기검거는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첩경이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검거가 되어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포상 승진 등으로 수사경찰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차 답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활력화의 기본요체라고 믿고 민생치안 강화대책과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적과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인사운용에 유의하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의 경과제(警科制) 등 이러한 제도를 보충해 나갈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면에서는 지난해에 경찰장학회를 설립해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했고, 특진대상인원에서 민생치안에 관련된 우수경찰관의 몫을 금년에는 대폭 늘려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휘관의 정기적인 휴무제와 직원특별휴

가제도 반드시 아무리 바쁜 속에서도 금년에는 이행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수사장비도 현대화해서 수사경찰의 업무에 능률도 기하고 사기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풍산금속 안강공장의 조기조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전망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부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노동부 등 또 현지 행정기관 이러한 모든 기관과 그동안 수차에 걸쳐 조기 정상조업을 위해 노력을 해 왔고, 노사 쌍방 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조 측은 노사교섭대표로 노조대의원 정동찬 등 3명을 새로 선임하고 회사 측에 설날상여금 100% 지급 및 파업기간 중 임금 60%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 오늘 14시부터는 안강읍사무소에서 공장장과 노조대표가 조업재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군 내의 안강읍사무소, 안강번영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관내 기관단체는 노조대표 및 기업주 측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또 저희 산하 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노사 간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조기 정상조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희 의원님께서 먼저 민생치안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또 물으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같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강희 의원께서는 경범죄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컴퓨터기록 말소에 대한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즉결심판의 대상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기록은 경찰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 전에 수록된 기록도 이 법 시행에 따라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혐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그리고 '무죄 확정된 사항'까지도 88년 7월 11일 자로 경찰의 컴퓨터에서 그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

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허형구**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 지난해 호송 재소자 탈출사건 이후의 교정행정 개선책은 무엇이며, 교도소 내에서 범죄수범 등을 더 배우게 된다는 등의 설에 대해서 그 실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교도소 호송 재소자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평소 일부 교도관들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어 재소자 호송 경호상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당 부에서는 즉시 재소자 수용질서 확립 등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교정행정쇄신방안을 수립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사명감을 높이고 감독자의 현장확인과 자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해이된 교정기강을 바로잡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소자 호송을 가급적 평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호송버스의 내부구조 변경 등 재소자호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재소자에게 TV·라디오 시청, 신문·도서열람 범위확대, 접견, 서신 집필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으로 민주화 시책에 부응하여 재소자들이 스스로 소내 규칙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교도관 2100명을 증원하게 되어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24시간 격일 2교대의 격무를 수행하여 오던 교도관들이 일반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교도관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교정행정은 일시적인 과오로 정상적인 사회생

활에서 이탈된 범법자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므로 수용생활 중 교정교육과 기술교육에 최선을 다하여도 이들 모두를 재범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 부에서는 김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에 입소한 이들 재소자가 흉악범 등 질이 나쁜 전과자들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범을 배우는 등 악성에 감염되어 출소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지구별로 분류, 전담교도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재소자 분류, 처우의 과학화를 위해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재소자에게 수용생활 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등으로 이들의 심성순화에 주력하는 한편 각자 적성에 따라 1인 1기의 기술교육이나 학교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이들이 출소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데에도 각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들 재소자들이 악성에 감염되거나 출소 후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소자의 교정 교화 업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은 여의도 농민시위사건의 수사상황과 그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성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시적이거나 무법적인 방화, 파괴, 폭력사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가의 범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의 일단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의원님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된 직후 이것이 단순한 농민들의 순수한 생존권적 차원에서 시위성격을 넘어서서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파괴, 폭력 등의 난동으로 치닫고 사전에 죽창, 화염병 등 살상용 시위용품들이 다수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동원이나 자금마련 등에 있어서도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점을 특히 중시하고 즉시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는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을 수사반장으로 하고 전국 각 검찰청과 수

사공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경찰을 지휘하여 이번 폭력사태를 주도 계획한 자는 물론이고 적극 가담한 자를 검거하고 지역별 인원 및 자금동원경위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위현장에서 연행한 28명 등 전국적으로 458명의 가담자를 소환 조사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17명을 즉시에 회부하고 나머지 343명을 훈방함으로써 현재 수사 중인 자는 87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89년 2월 초순경 각종 농민단체 및 농민지원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인원 및 자금 동원, 시위용품 준비, 차량대여 등의 임무를 분담하는 등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마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정이 심의되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러한 무법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검찰은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 주도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자 또는 농민의 신분이 아닌 자로서 이 시위에 가담한 자들은 물론 폭력사태에 적극 개입한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히 조치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균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공화국시대에 의문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부 재야 및 변사자의 가족들은 신호수 등 34명의 소위 변사자에 관해서 그 사인이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재수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변사사건들은 사건발생 당시 검찰이나 군검찰에서 관계자의 진술이나 변사체 검시 또는 부검결과 고 박종철 군과 같이 타살의 혐의가 있는 사건은 범인을 수사하여 처벌을 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달리 타살 등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사인규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의 변사사건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달리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무슨 자료가 있으면 하시라도 재수사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한 파괴 폭력행위의 빈발현상과 관련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법치주의에 있으며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 사회를 위해서나 국민 각 개인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질서는 민주주의의 근본바탕이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일시에 폭발하여 사회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불법 집단행동이나 바로 폭력행위는 그 도를 지나쳐 사회안정은 물론 민주발전에 도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서 뜻이 있는 사람이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법 무질서가 민주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력은 민주화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회 전체가 안정될 때만이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고 민주화도 순조롭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한 각종 불법 집단행동이나 파괴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적 안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업보장과 지속적 민주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국회의사당 앞 농민시위 폭력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엄정 수사 중에 있음

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서는 학술적으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막시즘이 학원가에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김태호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대학시절에는 모름지기 광범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인생관을 포함한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학생이 편향된 독서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교부에서는 대학시절에 요구되는 광범하고 다양한 교양도서를 계발하는 데 주력해서 그와 같은 교양도서를 대학에 많이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학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도합 120여 권의 교양도서 계발에 착수를 했으며 그것이 선정토록 일부 번역되고 제작되면 그러한 도서를 대학에 광범하게 보급함으로써 편향된 독서를 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고 광범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내에 있어서의 막시즘을 비판하는 학술적인 모임이나 토론회 같은 것을 지원하고 격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대학 내에 있어서의 교수 학생 간의 개별적 상담을 격려함으로써 그런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희 의원님께서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개선계획은 무엇이며, 학군제 폐지용의는 있는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은 지난 74년에 시행된 이래 적지 않은 공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등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 재수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소비(私敎消費)

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준화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를 수반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학교에 있어서의 수업효율을 저하시켰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영재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켰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고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일부 평준화시책을 완화하는 안을 작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에게 일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평준화시책을 해소하는 안까지를 제안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워낙 첨예화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문교부로서는 중앙교육심의회에 이 문제를 부의해서 현재 예의 심의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기회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지난 15년 동안 실시해 온 이 평준화시책을 일시에 바꾸는 데에서 오는 많은 교육적인 혼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평준화시책이 영재들의 교육의욕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영재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이른바 영재교육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군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서 현재 그 안을 가지고 서울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학군제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제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

셨습니다. 현재 학원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질서를 확립해서 대학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이 무엇이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요점 몇 가지 원칙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학원의 교학질서를 세워야 할 필요는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교학질서의 확립은 외부의 힘보다도 다소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의 자생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내에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대학에 그와 같은 자생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꼭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대학의 교학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교육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런 교육적인 원칙을 아무런 편법 없이 적용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셋째로 앞으로 대학에 대학 본연의 기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김홍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대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강희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넷째로 앞으로 대학이 대학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수 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믿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강희 의원께서는 문교부장관이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물음을 물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원의 안정을 가져오고 교학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결코 주저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있어서의 대화는 장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교수와 학생 간에 대화의 폭을 늘리는 데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원칙적인 것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문태준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높다라는 점과 기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누진적인 보험요율 적용과 통합일원화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료보험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불과 1년을 지나서 현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보험료 수준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지적과 농어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차별적인 진료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부과 문제는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과는 달리 소득과약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 간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그리고 세대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평균 보험료는 작년의 경우 세대당 월 4678원으로서 근로자는 작년 말 현재 5552원 그리고 공무원은 9043원을 매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도의 증가, 물론 보험이 날이 갈수록 의료기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와 보험료 징수율의 저조 등으로 인해서 조합 재정에 압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에 50개 조합에서 보험료를 평균 19.6%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에서는 작년도에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또 다소 높게 인상함으로써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주민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강력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운영을 합리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또 농어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료 징수율을 무리 없이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취약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제한문제에 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진료전달체계가 실시되면 진료권이 확대되고 직장근로자 그리고 공무원과 똑같이 단계적인 진료체계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한편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병원화하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진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누진율의 장치는 주로 조세제도에서 쓰이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에서는 부담과 급여의 형평문제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현재와 같이 자영자의 소득과악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 소득이 정확한 사람의 부담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러한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의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충조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강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오전에 물으신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 전체의 5.3%인 225만 명으로서 이들의 책정기준은 소득의 경우에서는 4인가구당 월수입이 18만 4000원 미만, 재산은 가구당 340만 원 미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층을 포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90년대 초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확대하고 또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종합생활안정대책에 관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 및 시설 보호대상자 40만 2000명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비와 의료 및 자녀교육비를 인상해서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의지를 키우고 빈곤의 세습화를 막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의 학비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자금의 융자 등을 합리화하고 또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대책장기발전위원회를 최근 구성해서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환**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동부장관입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비서실이 작성한 노무관리지침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와 그 내용이 비노조주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부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설립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정부나 사업주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한편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자에게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사관계가 불안한 업체에 대하여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분규 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은 정기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노무관리가 특히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으며 우리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은 노동위원회 3당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노동관계법은 87년 11월 27일 노사 관련단체와 여야 의원께서 수렴해서 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개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노동관계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재개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와 관행이 차츰 정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한 위장폐업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기업이 진정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휴·폐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에 속한다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조활동이 대폭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휴·폐업의 수단을 써서 노동운동을 와해하려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에서도 작년에 폐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폐업을 하여 노조운동을 방해한 사업장이 발생하여 당부에서는 녹십자병원 우리데이터 등 6개 폐업 사

업장에 대하여 즉각 정밀감독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입건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진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폐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관계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산업체 해고근로자의 병역특례 취소 조치는 노동운동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류승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류승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당면대책으로 금년 임금교섭에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거비는 물가의 하나로서 현재도 물가는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교섭에 관하여 노사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문제도 임금교섭 시 노사 간의 자율협약에 의하여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사내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장주택조합 결성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내복지기금법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복권을 근로복지복권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시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욕구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택마련이며 주택복권 등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 지원하고 있어 근로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 근로복지복권으로 전환할 특별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를 위한 건설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사내복지기금법 제정을 하여 여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노동부에서 5200세대의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등 노

사문제 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최근 분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현대계열기업과 포항지역 풍산금속의 분류현장에 본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도반을 파견하여 노노 간 또는 노사 간의 협상을 주선하는 등 분류타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자주적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노사교육을 강화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노동쟁의조정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급증하는 노사분규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노무관리 취약 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분류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간산업인 현대중공업과 주요 방위산업업체인 풍산금속이 장기간 조업중단 상태에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정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쌍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문제를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노사관을 정립시키고 보다 세련된 교섭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노사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각급 노사정간담회와 학계, 노동연구원 등에서 주최하는 노사문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준법의식이 확산되도록 하면서 평화적 노사교섭 관행의 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모든 분쟁은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노동관계법의 절차에 따른 조정이나 합법적인 노동쟁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노조나 근로자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노사문제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노사 쌍방에 대하여 공정하게 의법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강희 의원께서 노동금고 설립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금고의 설치문제는 기존의 금융제도와 외

국의 유사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재산형성 지원 등 실질적인 추가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중 복수노조 허용 여부, 제3자개입금지 조항 삭제,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단결권과 노동삼권의 보장강화에 대한 정부 측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정균환 의원의 질의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89년 정부의 임금교섭 지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및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동종업종 또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선 임금통계 등 임금의 교섭자료 지원, 공동교섭 활용 지도 등을 통하여 성숙한 노사 자율교섭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부득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8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0.7시간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는 일본, 서독 등도 법정근로시간이 아직도 주 48시간이고 다른 나라도 국민소득 삼사천 불 수준일 때 49 내지 50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LO 가입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ILO 가입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즉 유엔 회원국은 ILO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만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유엔 비회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정부대표 2/3를 포함한 전체 대표 2/3 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LO조약이 정한 노동기준을 대체로 노동법제에 수용되고 있어 국제정세의 변화, 회원국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가입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문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당 김태호 의원님께서 24시간 쏘아 대는 북한의 선전 선동 전파매체에 대해 대응책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북 간 대화교류가 점차 확대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강화 고도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남 전용방송으로 텔레비전이 2개 채널, 중파 라디오가 10개 채널, 대남 흑색방송인 민족민주전선방송을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 FM방송을 개시해서 선전메시지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무차별적인 선전선동폭력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는 제반 기술적인 조치를 장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의지를 고취시키는 일도 정부로서는 함께 추진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김 의원께서 홍수처럼 불어나는 폭력혁명 선동 간행물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앞서서 신민주공화당 김홍만 의원님 질의에 같은 답변을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다음 민정당 이강희 의원님께서 최근 신문 잡지 등이 난립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허위증명서 매매행위에까지 이르는 실태를 지적하시고 사이버언론의 횡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정신에 의하여 정부가 언론시책을 완전 자율화 개방화함에 따라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29 선언 이전과 이후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간지는 총 32종에서 67종으로 되었고, 주간지는 201종에서 517종으로, 다음 월간지는 1204종에서 1763종 등 무려 1200여 종의 정기간행물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간 주간 월간을 합친 정기간

행물은 총 3444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주간잡지들의 선전저속화라든가, 특정사안의 왜곡,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 외에도 때로는 광고 판매 등 영업활동이나 취재과정에서의 사회적 역기능과 비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버기자의 비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검찰에 설치하여 법을 위반하여 민생을 해치는 사이버기자에 대하여 엄한 사법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사이버언론을 감시하고 척결해 나가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이버언론에 의한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고발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건전한 언론매체들의 국민계도기사 게재 등으로 국민 각자가 감시자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는 한편, 각 언론 유관기관, 직능단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과 함께 언론사 자체의 사원교육 및 언론사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비리가 기생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이 문화로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문화행정의 지방화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과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의 종합문화회관 특장 전문시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시설의 지방건립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 전국 시군 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시설을 전 시군 단위로 확충하고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그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현재 입안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전국 규모나 서울에서 집중 실시되던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의 지방순회 개최 등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축제행사 등을 계속 발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부에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서해안 낙도 난시청지역 해소와 인천 TV 지방방송국을 설치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낙도의 TV 난시청 현상은 백령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악산의 TV방송전파 가시권 내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지역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에 따라서는 수신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89년에는 동 지역의 수신상태의 개선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역의 지방방송 실시는 인천직할시의 지역방송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90년에 라디오방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TV방송 실시는 동 사업실시 결과에 따른 종합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공보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부 독립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이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 문화부의 발족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평민당 김충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정성의 정의에 관한 저의 답변이 본의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본인의 표현 미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진의는 공정성에 관한 방송의 심의 규정 18조에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관점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하자면 다각도라는 점을 제가 강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주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제가 방송 전에 또 방송 후에 공한을 보낸 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그 프로를 검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었느냐 검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첫째, 공한을 보낸 데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 주무장관으로서 방송이 공정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방송사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

다마는 법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42조에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 예술, 국내외 여론조사, 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의한 문화공보부 직제 제3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방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가지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정한 내용이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주무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한을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공한은 명령성도 강제성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공부가 사전에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검열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는 당시에는 주지하시다시피 도하 각 신문에 그 프로에 관계해서 사전에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 PD의 인터뷰기사도 있었고 또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당시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의 프로가 될 경우에는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 근거해서 제가 그런 공한을 보냈던 것인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낸 공한이 마치 과거처럼 정부가 무슨 압력이라도 넣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선진한 나라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런 서한을 보내는 예는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다만 문제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끝으로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김용갑 총무처장관입니다.

민정당의 김태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자세 확립과 사기양양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 등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소 해이해진 공직자의 기강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국가의 공권력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공권력 회복의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공직자들 스스로의 자율적 자각과 노력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점검활동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눈에 띄게 일신되고 공무원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자율공직기강 확립과 점검활동을 통해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또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 공무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는 반면 민생문제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나태한 공직자는 이를 엄중 문책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사기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양자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실효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 복지대책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인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공무원보수가 아직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의 수준에 크게 밀리고 있어 5000불 시대를 향한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는 이 공무원보수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 보다 긍정적인고 전향적인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어 공무원보수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 국영기업체 보수의 63%에 불과한 공무원보수 수준을 91년도까지 90%에 도달시키고자 3개년 연차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적으로 개선하여 그 격차를 해소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민당의 김충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국보위 파견 공무원 중 현재 각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명단을 밝히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문서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추후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제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환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 4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높은 경륜과 건설적인 정책이 정부시책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서 한 약속은 국민에게 대한 공약이므로 성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노고들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내일 2월 18일에 지난번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1980년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시58분)

○부의장 노승환 따라서 오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3월 초이틀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참고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합중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 시 국회연설 문

제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이 문제가 확정되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본회의 재개할 것을 개별 통지드리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산회)

○출석 의원 수(259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강영훈
내무부장관	이한동
법무부장관	허형구
문교부장관	정원식
체육부장관	김집
보건사회부장관	문태준
노동부장관	장영철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
총무처장관	김용갑

【보고사항】

○특별위원 변경

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민주발전을위한 법률개폐특별	김영진	조홍규	평화민주당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	조홍규	김영진	"

(2월 15일 자)

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	조순승	조홍규	평화민주당
민주발전을위한 법률개폐특별	조홍규	조순승	"

(2월 16일 자)

○의안 제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2월 16일 김인곤 의원 외 34인 발의)

발의자	김인곤
찬성자	구자춘 김두운 김문원 김병용 김용채 김용환 김제태 김종식 김종필 김현 김홍만 박병선 박충순 신오철 신진수

신철균	연제원	오용운
옥만호	유기수	윤성환
윤재기	이대엽	이병희
이인구	이재연	이종근
이택석	이희일	정시봉
정일영	조부영	최각규
최무룡		

이상 3건 2월 17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6일 박재규 의원 이희천 의원 윤재기 의원 외 67인 발의)

발의자	박재규	이희천	윤재기
찬성자	김득수 김영진 김주호 김충조 김태식 류인학 박상천 박석무 박형오 서경원 이경재 이돈만 이동근 이상수 이영권 이원배 이철용 이협 이형배 임춘원 정기영 정상용 조순승 조승형 조홍규 조희철 채영석 최락도 한광옥 강보성 강삼재 김남 김덕룡 김동규 김봉조 김우석 김운환 金正吉 노무현 류승규 문정수 박경수 박관용 박태권 백남치 서석재 서청원 석준규 송두호 신하철 이인제 장석화 정상구 조만후 최기선 최정식 황명수 황병태 김두운 김병용 김현 박충순 윤성환 이인구 이재연 정일영 조부영		

2월 17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2월 1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월 17일 의장 제출)

2월 18일 (13일간)
3월 2일

○청원 제출

재정신청 범위확대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2 석원빌딩 5층 송윤진으로부터 권노갑 의원 손주향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청원인은 고소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으로는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 제260조를 개정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제5공화국 당시 부당하게 행사된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34개월간 복역까지 하는 등 재산권과 명예를 침해당한 청원인은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함.
3.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양심적인 법관에게 재정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야 하므로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를 개정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7-7 대건빌딩 1001호 공신감정평가합동사무소 류일국으로부터 박충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정부에서 제출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은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는 입법취지와 달리 전문자격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동 법안을 수정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은 88. 6 당초 입법 예고된 내용과는 달리 평가법인인 합명회사형 법인의

설립시기를 2년간 유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을 본 법에 의한 법인형태로 전환기로 한 조항이 삭제되어 한국감정원이 현존체제를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독점체제 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입안되어 있어 전문자격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원래 입법 예고한 안대로 동 법안을 수정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2월 17일 건설위원회에 회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에 관한 청원

(2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 내 한국방송광고공사해체추진위원회 광명세 외 1인으로부터 강삼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방송광고를 정부가 독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88년 모법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법의 존속명분이 상실되었으므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방송광고 독점 판매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80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각 방송사 영업기능을 대행해 왔으나 88년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현시점에서 방송의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방송광고를 정부가 독점함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자율과 창의를 생명으로 하는 광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방송광고의 영업기능을 개별 방송사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2월 17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원주시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질문서

(2월 16일 박경수 의원 제출)

2월 17일 정부에 이송